

# 21세기 미국의 한반도 정책, 그 현실과 전망

미주통일학연구소 한호석 소장 초청 강연회



## 미국의 한반도 정책, 그 현실과 전망

- 1) 7p 7줄 『한국일보』 1998년 7월 3일자.
- 2) 7p 9줄 『한겨레』 1996년 2월 8일자.
- 3) 7p 10줄 *New York Times*, 1997년 5월 31일자.
- 4) 7p 11줄 『중앙일보』 1998년 6월 4일자.
- 5) 7p 12줄 『한국일보』 1996년 1월 24일자.
- 6) 8p 15줄 미 국무부 외교문서는 1961년 11월 일본 각료들 사이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 (『한겨레』 1996년 9월 25일자) 일본은 중국이 1964년 10월 처음으로 핵실험에 성공하자 이에 자극을 받았으며, 1965년 1월 사토 에이사쿠 일본 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하여 존슨 대통령에게 일본도 핵무기를 개발해야겠다는 발언을 하였다고 한다. (『한겨레』 1998년 5월 26일자)
- 7) 8p 20줄 『한국일보』 1998년 12월 10일자.
- 8) 8p 21줄 『세계일보』 1997년 8월 16일자.
- 9) 8p 22줄 미 군비통제군축국(ACDA)이 1965년에 작성한 비밀보고서 『일본의 핵무기 분야전망』에 따르면, 일본은 1971년 이후 해마다 10~30개 핵무기를 생산할 능력이 있으며, 1975년까지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및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최대 1백기까지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핵무기 실험시기는 1968년이 될 수 있다고 내다본 바 있다. (『조선일보』 1997년 5월 13일자)
- 10) 8p 23줄 『중앙일보』 1997년 12월 23일자.
- 11) 9p 6줄 이 세력은 다카키 마사오(高木正雄: 박정희의 창씨개명 이름)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만군인맥이다. 만군인맥은 봉천에 있었던 2년제 봉천군관학교와 그 후신인 신경의 4년제 만주제국 육군군관학교 출신들이다. 이들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지휘관들이었고, 5.16쿠데타를 성공시키는데 협력하였으나, 그 뒤로는 권력투쟁에서 박정희 - 김종필 세력에 의해 거세되어 퇴장하였다. 박정희의 만군인맥은 일본의 만주인맥과 손을 잡았다. 만주국 경영권을 쥐고 있었던 만주국 총무청차장 기시 노부스케(일본 수상을 역임함), 만주국 산업부 국장 출신 시이나(자민당 부총재 역임)는 일본의 만주인맥의 중심인물이며, 한 - 일 국교정상화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맡았다. (『조선일보』 1998년 4월 4일자)
- 12) 9p 7줄 5.16쿠데타를 일으킨지 여섯달이 지난 1961년 11월 11일 박정희(당시 최고회의 의장)는 최초의 외국 방문지로 일본을 택했다. 그는 도쿄 중심가에 있는 아카사카 요정 가와사키에서 일본 마후정치(마후정)의 실세라고 하는 자민당 간부들과 점심을 나누었는데, 그 자리에서 일본 정치인들에게 일본식 큰절을 올리고 일본말로 이렇게 말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에겐 젊다는 것 외에 별다른 자산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잘 지도·편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입) 아무것도 모르고 경험조차 없는 우리는 다만 맨주먹으로 황폐한 조국을 재건하려는 의욕만 왕성합니다. 마치 일본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킨 젊은 지식들과 같은 의욕과 사명감을 가지고 그 분들을 본받아 가난에서 벗어나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가려는 것입니다.” (『중앙일보』 1997년 10월 15일자) 그로부터 2년 뒤인 1963년 12월 박정희 대통령의 취임사절로 서울에 왔던 자민당 부총재 오노 반보쿠는 귀국 기자회견에서 “아들의 성공을 보는 아버지의 흐뭇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1997년 10월 21일자)



13) 9p 8줄 1957년 6월 일본 총리 기시 노부스케가 워싱턴을 방문하면서 한 - 일 두 나라는 실무차원의 잠정 합의안을 체결했다. 이 합의안에서 일본은 1953년 한 - 일 국교정상화 일본측 교섭대표였던 구보타 간이치로의 망언(그는 "일본이 식민통치 때 조립, 전담, 항만시설 등 경제적으로 공헌했으므로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망언을 하였고 이에 반발한 이승만 정권은 '이승만 라인'을 선포하고 일본 어선을 나포하여 교섭회담이 깨졌다.)을 완전 철회하겠다는 것을 명시했으며, "1957년 6월 미국의 견해에 기초해"라는 문구를 넣어 한 - 일 국교정상화 교섭에 미국이 처음부터 큰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시사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문구의 문구는 나중에 삭제되었다. (『중앙일보』 1998년 12월 8일자 참조)

14) 9p 16줄 카터는 주한미지상군을 4~5년 안에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1977년 5월 29일 서전트 미사일 대대가 철수했다. 같은 해 7월 이후 2개 미사일 대대의 주한미군 1천23명이 철수했다. 1978년 11월 22일에는 주한미지상군 5백명이 철수했다. 12월에는 전투부대 1진 2백 19명이 철수했다. (『중앙일보』 1995년 10월 24일자)

15) 9p 17줄 박정희 정권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한 시점에 관해서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었던 김광모 씨는 1971년에 방위산업과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해 청와대에 경제2수석실이 설치됐고, 박정희는 1973년에 핵무기를 개발해야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겨레』 1998년 8월 8일자)

16) 9p 18줄 1970년대 중반 핵폭탄 설계가 끝났고, 1981년에 핵연료 국산화사업을 완성할 계획이었으나 미국의 방해와 프랑스에서 시설도입이 지연되면서 1983년으로 완성시기가 수정되었다. (『중앙일보』 1997년 10월 28일자)

17) 9p 19줄 미국 문서보관소가 1998년에 공개한 자료에는 1974년 12월 11일부터 미국 정보기관이 남한의 핵무기 개발 능력에 대한 평가를 시작했던 사실, 1975년 3월부터 남한의 핵무기,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경고하였던 사실, 그 뒤로도 미국은 계속 대량파괴무기 개발을 중단하라는 압력을 가해왔다는 사실이 들어있다. 박정희는 미국의 압력을 무시하고 '화학처리 대체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다가 1979년 10월 피살되었다. (『중앙일보』 1998년 9월 29일자 참조)

18) 9p 23줄 전두환 정권은 1981년 1월 핵연료개발공단을 원자력연구소와 통합시키고 이름을 에너지연구소로 바꾸게 하였으며 핵개발에 관한 연구는 물론 원자력이라는 용어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막았다. (『중앙일보』 1997년 11월 12일자)

19) 9p 23줄 박정희 정권은 1978년 9월 26일 지대지 미사일 백곰(NHK-II)의 시험발사에 성공하였다. 미국의 나이키-허큘리스(NH)를 모방한 이 미사일은 1979년부터 실용 개발, 생산에 착수하여 실전 배치되기 시작했다. (『세계일보』 1998년 6월 13일자) 그런데 미국은 1979년에 '백곰'의 핵심부품을 제공하는 대가로 사정거리 1백80km, 탄두 무게 5백kg을 넘는 어떠한 로켓의 개발도 포기하라고 요구했고 전두환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국방과학연구소(ADD) 유도탄 개발사업단을 해체했고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미사일 양해 각서를 작성했다. 미국은 1980년대말 현무 2차 사업때 1년 이상 핵심부품을 넘겨주지 않으면서 사정거리 제한 대상을 현무는 물론 다른 민간 과학용 로켓에까지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1990년 10월 남한은 이 요구도 받아들였다. 남한은 1995년 11월부터 미국과 미사일 협상을 벌이면서 미사일 사정거리를 3백km 이상 상향 조정해 줄 것, 민간로켓 규제를 철폐해 줄 것,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가입을 미국에게 요구해오고 있다. 미국은 미사일 사정거리 3백km 규정을 준수할 것, 민간로켓을 군사목적으로 전용하지 말 것, 로켓 개발 투명성을 문서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겨레』 1997년 7월 2일자, 『조선일보』 1998년 9월 21일자 참조)

20) 9p 26줄 북한은 1970년대 중반 중국에서 사거리 6백km, 탄두무게 2t의 DF61 미사일을 들여와 미사일 개발에 관한 기술을 쌓았다. 북한은 1973년 10월 제4차 중동전이 일어나자 이집트에 공군 1개 대대 30명을 파견하

여 이스라엘 공군과 싸웠는데, (『조선일보』 1998년 9월 15일자 참조) 이집트는 1976년에 중동전 참전에 감사하는 뜻으로 소련에서 구입했던 스킨드 미사일을 북한에 공수하였다. 북한은 이 미사일을 분해하여 역설계하고 개량형 미사일을 독자기술로 개발하는데 8년이 걸렸으며, 1984년 4월과 9월에 독자기술로 개발한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하였다. 이 미사일이 대량생산하기까지는 또다시 3년이 걸렸는데, 북한은 이 미사일을 1987년 한 해에 수백기를 생산하여 이란에 수출했다. 북한은 1989년에 인공위성을 쏘아올릴 수 있는 다단계 로켓을 제작하는데 성공하였고, 1992년에 인공위성을 발사할 계획을 세웠으나 밝혀지지 않은 이유로 중단했다. 이듬해 5월 북한은 세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한 발은 동해의 목표물에 명중했고, 다른 한 발은 하와이 부근 바다에, 또 다른 한 발은 괌 부근 바다에 떨어졌다고 한다. (Kim Myong Chol, "Farewell To 1994 Agreed Framework!", The Nautilus Institute, Northeast Asia Peace and Security Network, 1998년 11월 24일자 참조)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 가운데 프로그와 스킨드-C를 제외한 나머지 3종의 미사일은 모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북한은 제주도를 포함한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스킨드-B와 C 미사일 6백50기를 실전배치하였다. (『중앙일보』 1996년 4월 20일자, 6월 10일자 참조)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 이스라엘, 이란, 리비아, 시리아,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이다. 후발국자들 가운데 탄도무기를 보유한 나라는 19개 나라인데, 그 가운데 독자적으로 개발한 나라는 북한, 인도, 이스라엘 뿐이다.

21) 9p 30줄 미국은 1989년 스텔스 폭격기 F-117을 개량하여 B-2 스텔스 폭격기를 생산했다. 이 폭격기는 1997년 상반기에 실전배치되었는데, 핵폭탄 16개를 싣고 대륙간 핵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 (『조선일보』 1997년 4월 4일자) 순양함, 핵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게 도였고, B-1, B-2, B-52 폭격기에서도 핵공격을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지상배치 핵무기는 그만큼 기술적 가치가 떨어졌다.

22) 9p 31줄 최근 기밀해제된 미 태평양사령부 총사령관(USCINCPAC)의 1991년도 작전일지에 따르면, 미국은 남한에 배치했던 지상공격용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을 포함해 AFAP(포탄발사용 핵폭탄), 항공기 적재용 폭탄 등 총 2천여기가 넘는 전술핵무기를 1991년 11월 20일을 전후해 모두 본국으로 철수했다고 한다. (『한국일보』 1998년 11월 4일자)

23) 9p 33줄 미국은 남한과 함께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비확산 대책반(Nonproliferation Task Force)을 운영하고 있다. (The United States Securit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1998, 48쪽 참조)

24) 9p 34줄 미국은 영변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엄청난 사상자가 생겨나고 천문학적 규모의 전비를 감당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세계 경제가 파탄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공격계획을 철회한바있다. 베트남전쟁에서 미군 전사자는 5만8천명, 부상자는 15만3천명이었으며, 한국군 전사자는 4천9백60명, 부상자는 1만9백62명이었으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상자가 나온다는 것이다.

25) 10p 3줄 미 의회와 중앙정보국이 위촉한 9인 위원회(위원장인 도널드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가 '미국에 대한 미사일의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실전배치했으며,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 6천 2백마일(약 1만km)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을 뿐아니라, 핵무기 개발 가능성이 있으며, 생화학무기를 생산하고 미사일에 장착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1998년 7월 17일자)

26) 10p 19줄 남한 정부 당국자가 최근 밝힌 바에 따르면,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에 별도로 작성된 비밀각서(confidential minute)에는 북한이 핵관련 시설을 더 이상 건설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한겨레』 1998년 11월 28일자)

27) 10p 21줄 『시사저널』 제471호, 1998년 11월 5일자, 50~51쪽.



28) 10p 32줄 같은 책, 51쪽.

29) 10p 34줄 이것은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견해다. (『중앙일보』 1998년 11월 24일자 참조)

30) 11p 27줄 『시사저널』 제438호 (1998년 3월 19일자), 38~41쪽 참조.

31) 12p 1줄 남한의 국제통화기금 협약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과 확인은 미 재무부와 주한미국대사관이 담당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나라들 가운데 미 재무부의 공식 확인을 받아야만 추가자금을 타낼 수 있도록 된 나라는 남한 뿐이다. (『중앙일보』 1998년 12월 16일자 참조)

32) 12p 1줄 미국이 국제통화기금과 함께 요구하고 있는 '재벌 길들이기'의 구체적인 내용은 경영 투명성 제고, 지급보증 해소, 동일인 여신한도 축소, 부당 내부거래의 근절, 국제적 수준의 회계제도 도입 등이다.

33) 12p 26줄 『한겨레』 1998년 8월 19일자.

34) 13p 5줄 『중앙일보』 1999년 1월 5일자.

35) 13p 15줄 『시사저널』 제480호, 1999년 1월 7일자, 49쪽.

36) 13p 23줄 『중앙일보』 1999년 1월 5일자.

37) 14p 5줄 Madeleine K. Albright, "The Testing of American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 1998년 11~12월호, 60쪽.

38) 14p 32줄 로버트 매닝이 The New Republic 최신호에 발표한 기고문 「시한폭탄」 (『조선일보』 1998년 11월 18일자에서 다시 옮김)

39) 15p 1줄 워싱턴의 전략가들 사이에서는 '북한 붕괴설'이 유행처럼 번졌던 시기가 있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미국의 랜드연구소, 닉슨자유평화센터, 하버드대 과학국제관계센터가 6개월 동안 공동연구를 벌인 끝에 작성한 보고서 「미국의 국익」은 북한이 경제, 사회, 정치권력의 3중위기 때문에 1996년 안에 붕괴국면에 빠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중앙일보』 1996년 7월 18일자)

40) 15p 8줄 *New York Times* 1999년 1월 3일자.

## 관여·확장 전략과 협상·공존 전략의 대치, 그리고 한(조선)반도 통일 정세의 변동 방향

1) 16p 5줄 미국이 북(조선)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들 가운데 한 나라로 지목하고 있으면서도, 북(조선)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기본적인 의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 이 통계 자료는 미국의 시카고 외교관계협의회(Chicago Council on Foreign Relations)가 주최하고, 미국의 Gallup Organization이 1994년 10월에 조사한 것으로, 보고서 "American Public Opinion and U.S. Foreign Policy"에 발표된 것이다. (John E. Rielly, "The Public Mood at Mid-Decade", *Foreign Policy*, [Spring 1995], 77쪽) 참고로 미국이 가장 싫어하고 있는 나라들을 순서별로 살펴보면 이라크(24%), 이란(28%), 북코리아(34%), 쿠바(38%), 하이티(44%), 중국(46%), 아르헨티나(47%), 남코리아, 인도, 타이완, 사우디 아라비아(모두 48%) 등으로 나타난다. (같은 글, 85쪽) 한(조선)반도의 분단이 유지되는 한, 그리하여 미국의 남(한국)에 대한 예측 상태가 지속되고, 미국의 북(조선)에 대한 봉쇄·대결이 지속되는 한 남(한국)이나 북(조선) 모두 미국에게 별로 달갑지 않은 나라로 인식되는 불행한 현실은 아마도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16p 8줄 미국무장관 워런 크리스토퍼는 새로운 세기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미국은 제1차,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직후 미국이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직면했던 상황을 상기시켜 주는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냉전에서-인용자 주) 승리했으므로 뒤로 물러서느냐, 아니면 미국이 영도력을 행사하여 미국과 전 세계 인민들을 위하여 평화와 자유와 번영이 넘치는 세계를 건설하느냐 하는 갈래길이 미국 앞에 놓여있다고 보았다. 그는 미국이 장기적 안목에서 영도(leadership)와 관여를 추구하는 것은 현시기 미국 외교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고 밝히고, 미국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전세계적 판도에서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arren Christopher, "America's Leadership, America's Opportunity", *Foreign Policy*, [Spring, 1995], 6쪽)

3) 16p 10줄 워싱턴에 있는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아시아 정책담당 선임연구원 해리 하딩(Harry Harding)은 카네기 국제평화재단(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이 펴내는 외교 전문지 *Foreign Policy*, 1994년 가을호에 발표한 논문 「벼랑에 선 아시아 외교」에서 미국의 전략 수립자들은 '확장 전략'을 아직 확정짓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1994년 봄 윈스턴 로드가 미 국무장관 워런 크리스토퍼에게 제출한 비망록에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쌍무적 외교 관계가 침식되면서 불안정이 생기고 있다고 경고하고, 클린턴 행정부는 장기 목표가 아니라 단기 목표에 집착하려는 경향, 그리고 미국의 외교 정책을 미국의 국익에 대한 포괄적인 전망 위에서 수립하려고 하지 않고, 특정 기관이나 부서의 좁은 관점에서 수립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음을 전하고 있다. 로드의 말을 빌리면, 클린턴 행정부가 냉전 시대의 '봉쇄·대결전략'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대결의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국제 사회에서 '골목깡패'가 아니면 '유모' 꼴이 되고 있으며, 미국의 주도권에 대해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더욱 반발을 사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Harry Harding, "Asia Policy to the Brink" *Foreign Policy*, [Fall 1994], 71쪽)

4) 16p 13줄 James A. Baker, III, "America in Asia: Emerging Architecture for a Pacific Community", *Foreign Affairs*, vol. 70, no. 1, (Winter 1991-1992), 1-18쪽. 이 글은 탈냉전 시대의 '관여·확장 전략'을 논의한 출발점이었다. 이 글에서 그는 경제 통합 구조,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공헌, 역내 군사체계의 개선이라는 세 가지 점을 논의한 바 있다.

5) 16p 15줄 윈스턴 로드는 1993년 3월 미 상원 외교관계위원회에서 '새로운 태평양 공동체 창설'을 주제로 발표한 내용과 8월 31일 「미국의 동아시아·태평양 정책」이라는 제목의 특별 설명회에서 '관여·확장 전략'을 더욱 다듬었다고 볼 수 있다. "Lord Lays Out 10 Goals for U.S. Policy in Asia", *USIS Official Text* (1993년 4월 5일), 10쪽.



6) 16p 20줄 레이크의 이 연설 전문은 1993년 9월 27일자로 나온 U.S. Department of State Dispatch Vol. 4에 실려 있다.

7) 16p 22줄 이 연설 발췌문은 New York Times 1994년 9월 23일자에 실려 있다.

8) 17p 1줄 조셉 나이는 하버드 대학의 국제문제연구소(Center for International Affairs) 소장, 국가정보협의회(National Intelligence Council)의 의장으로 있다가, 국방부 국제안보담당관(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이 되었다. 원래 그는 지역통합론자로서 이름을 떨친 바있다. 일찌기 그는 지역 통합(regional integration)이라는 개념을 경제 통합(economic integration), 사회 통합(social integration), 정치 통합(political integration)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설명한 바있다. Joseph S. Nye, *Peace in Parts: Integration and Conflict in Regional Organization*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71) 여기서 우리는 그가 '통합'이라는 개념을 관여·확장 전략으로 발전시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미국의 전략 수립자들은 한(조선)반도의 통일 문제를 '통합'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관여·확장 전략과 통합 개념은 서로 친화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미국이 통일 문제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전략적 관점에서 비롯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는 1995년말 하버드 대학으로 다시 자리를 옮겼다.

9) 17p 3줄 미 국방장관 윌리엄 페리(William Perry)는 이 보고서의 서문에서 1990년과 1992년의 국방부 보고서는 90년대 말까지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탈냉전 시대의 추세에 맞게 군사력을 감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올해 미 국방부는 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전진 배치한 현존 10만명 병력수준을 앞으로 장기간 동안 유지하기로 확정했다고 적었다. 조셉 나이는 이 보고서에 관련한 핵심 내용을 *Foreign Affairs* 1995년 7·8월호에 「심층 관여의 상황」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발표한 바있다. (Joseph S. Nye, Jr. 'The Case for Deep Engagement', *Foreign Affairs*, [July/August 1995], 90-102쪽) 그는 1995년 1월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한 회견에서 이러한 관여 전략 구상을 언론(『중앙일보』, 『조선일보』 1995년 1월 25일자)에 미리 흘린 바있다.

10) 17p 6줄 미 국방부가 1990년 4월 19일 '년·워너 수정안'을 따라 의회에 제출·공개한 「동아시아 전략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우리는 미국의 장기적 이익을 지탱해줄 미군 병력 수준의 재조정을 1990년 기간중 모색할 것이다. ① 제1단계 (1990년 10월~1993년 12월) - 유엔군 사령부는 현재의 형태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손속되어야 할 것이다. 주한 미공군 2천명, 지상군 비전투 요원 5천명을 감축한다. 미 지상군 무력을 강화하고, 남(한국)군의 군사력을 강화한다. ② 제2단계 (1994년~1995년) - 제1단계 후반에 이르면 미국은 북(조선)의 위협을 다시 조사·평가하여 제2단계를 위한 새로운 목표를 수립한다. 미 제2사단 개편을 이 시점에서 검토할 것이다. ③ 제3단계 (1996년~2000년) - 모든 단계들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남(한국)군은 주도적인 일을 맡을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억지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미 군사력은 줄어들 것이다." (『중앙일보』 1990년 4월 21일자)

11) 17p 9줄 『조선일보』 1995년 1월 25일자.

12) 17p 11줄 미국이 자신의 안보 공약 의지를 과시하고 신속 대응군(RPF)의 기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미군을 자국의 사활적 이해 관계가 걸려있는 지역에 최대로 근접하게 전진 배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전진 배치 무력은 정치적 상징으로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미 군사 전략의 핵심이라고 지적한 언론의 분석(『중앙일보』 1995년 8월 5일자)은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13) 17p 16줄 Joseph Nye, 앞의 글, 102쪽. 워런 크리스토퍼는 미국의 영도란 확실한 무력 위협을 동원하여 지구력있는 외교를 뒷받침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수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했다. (Warren Christopher, 앞의 글, 8쪽)

14) 17p 20줄 Joseph Nye, 같은 글, 95쪽. 한편 미 국무장관 워런 크리스토퍼는 한 외교 전문지에 기고한 자신의 글에서 미국의 사활적 이익과 미국의 동맹국들, 그리고 이웃 나라들을 위협하고 있는 '망나니 국가' 들을 이라크, 이란, 리비아로 지목하였고, 북(조선)은 포함하지 않았다. (Warren Christopher, 같은 글, 7쪽.) 여기서 우리는 미 국방부와 국무부의 대북 인식이 미묘한 편차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발견한다.

15) 17p 23줄 『중앙일보』 1995년 10월 13일자.

16) 17p 32줄 그는 1977~1985년까지 미 국무부의 정치·군사담당 차관보로 일했으며, 1985~1989년에는 랜드연구소의 주요임원으로 일한 바있다. 그는 미 국무부 정치담당차관으로 있었던 1992년 1월 뉴욕에서 북(조선)의 김용순 비서와 조·미 고위급 회담에 미국대표로 참가한 바있다.

17) 17p 33줄 Arnold Kanter and Linton F. Brooks, (eds.), *U.S. Intervention Policy for the Post-Cold War World: New Challenges and New Responses*, (New York: W.W. Norton & Company, 1994) 15-16 참조.

18) 18p 1줄 Warren Christopher, 앞의 글, 8쪽.

19) 18p 6줄 같은 글, 12쪽.

20) 18p 8줄 이 연례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3대 전략 목표가 미국의 안보 강화, 미국의 경제 회복, 국제 사회의 민주주의 증진이며, 동아시아의 전략 목표는 10만 미군을 계속 전진 배치하고, 동북아 지역에서 협력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아·태 경제협력체(APEC)를 발판으로 한 통상 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밝혀져 있다. (『세계일보』 1996년 3월 19일자)

21) 18p 10줄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아시아연구소(소장: 제임스 프리즈스탑)이 1995년 9월 11일 발간한 「95 미국과 아시아의 통계 핸드북」에서 지적한 것이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아시아에 대한 수출은 전년 대비 20%가 증가했으며, 여기에 관련된 직업은 82만8천개가 유지되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1995년 9월 13일자) 미국의 지배 계급은 자국의 사활적 이해 관계가 걸려있는 나라들 가운데 90% 이상의 응답을 보인 나라를 러시아(98%), 멕시코(98%), 일본(96%), 중국(95%), 사우디 아라비아(94%), 캐나다(93%), 독일(91%), 남코리아(90%) 순으로 뽑았다. (John E. Rielly, 앞의 글, 76-93쪽) 미국은 한(조선)반도에 대한 이해 관계가 중국과 일본에 대한 관계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한(조선)반도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가치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2) 18p 11줄 미국의 아시아 전략 수립에 직결되어 있는 5가지 요인을 이렇게 풀이하는 전문가도 있다. ① 미국의 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따라서 아시아 지역에 전진 배치한 무력을 유지하는 비용을 감당하기가 점차적으로 힘들어진다는 점, ② 미국은 이 지역의 안정을 주도하기가 힘들어졌으며, 이 지역에 현존하는 쌍무 안보협정들이 역내 역학 관계의 변동과 상호 의존성의 증대와는 결맞지 않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는 점, ③ 미·일 상호안보관계의 기반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일본의 대국화를 저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④ 러시아, 중국, 베트남, 그리고 궁극적으로 북(조선)을 더욱 확고한 역내 질서 속으로 편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⑤ 지역 안보 비용을 절감하고, 일본과 같은 역내 강대국들이 등장하는 것을 견제하고, 미국의 전진 배치 무력에 대한 주도국의 지원을 더 많이 끌어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미국은 지역 안보협력체 건설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Joseph A. Camilleri, "The Asia-Pacific in the Post-Hegemonic World", Andrew Mack and John Ravenhill, eds. *Pacific Cooperation: Building Economic and Security Regimes in the Asia-Pacific Region*,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95), 206쪽.



23) 18p 12줄 지난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 탈냉전이 시작되던 중요한 시기에 남(한국)과 중국의 대사를 역임했던 제임스 릴리(현재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아시아 연구 책임자)는 남(한국)의 한 일간지와 한 대담에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냉전 이후 이 지역에서(동아시아 지역을 뜻함-인용자) 새로운 기본 규칙을 필요로 한다. 미국은 이 규칙 마련을 위해 노력중이다”고 설명한 바있다. (『조선일보』 1996년 3월 18일자)

24) 18p 17줄 『한국일보』 1995년 9월 5일자.

25) 18p 20줄 자세한 내용은 셀릭 해리슨의 『중앙일보』 1995년 9월 28일자 대담 기사에 들어있다.

26) 18p 23줄 탈냉전 시기에 들어섰는데도 한(조선)반도를 지향하는 미국의 무력 증강 배치 및 군사 훈련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 언론에 밝혀진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이렇다. ① 미국은 1개 중여단분의 최신 전투 장비를 대형 수송선 4-5척에 실어, 최근 괌에 배치했는데, 이 무기들은 오키나와 주둔 미 제3해병과 미국 본토에서 수송될 미 육군, 해병으로 구성될 이른바 ‘신속 기동군’을 짧은 시간 동안에 무장시킬 무기들이다. 이 무기들은 원래 싱가포르 해안에 배치하려고 한 것인데 싱가포르 정부가 반대하는 바람에 괌에 두게 된 것이라고 한다. 미국은 이미 이러한 전진 배치 무기들은 우리나라 동해안에도 2개 중여단 규모를 배치해두었다. 미국은 냉전 시기에 중유럽 지역에 전진 배치했던 5개 중여단분 무기의 일부를 철수하면서, 그 가운데 3개 중여단분 무기를 우리 땅과 괌에 배치하였다. 미 국방부는 1993년 새 국방 계획(BUR)을 수립하고 신속 기동군을 창설했는데, 이 전략군은 한(조선)반도를 지향하여 전개할 전술 무력 단위다. (『중앙일보』 1995년 10월 13일자) ② 미국이 최첨단 장비를 갖춘 작전 기지들, 이를테면 전역 항공 통제 센터(Theater Air Control Center), 중앙 방공 관제 센터(Master Control and Reporting Center), 코리아 전투 작전 정보 지원 센터(Korea Combat Operations Intelligence Center)를 오산 미 공군 기지에 배치해놓았다. 한·미 연합사, 주한미군, 태평양 사령부를 지원하기 위한 작전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남(한국)과 북태평양 지역을 작전 범위로 삼고 있는 주한 미 공군은 미 태평양 사령부 예하 4개 공군력들 가운데 하나인데, 주일 미 공군보다 규모가 크다고 한다. (『조선일보』 1995년 10월 12일자) 주한미군은 ‘탱고’(TANGO: Tactical Airforce-Navy-Ground Forces Operation), ‘서울’, ‘오스카’로 이름을 붙인 3개의 핵심 지휘 통제소를 핵공격과 생화학공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건설한 극비 지하 bunker 안에 구축해놓고, 미군의 최첨단 정보 시설인 ‘스킵’(SCIP)를 가동하고 있다고 한다. (『조선일보』 1995년 9월 23일자) ③ 미국은 1995년 10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인 ‘95 독수리 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에는 주한미군 2만여명은 물론, 미국 본토와 미 태평양 함대 사령부 소속 7함대 병력 1만여 명과 서울 이남 지역에 있는 남(한국)군 모든 병력이 참가했으며, 미 제7함대 지휘함인 ‘블루릿지 호’가 이끄는 핵추진 잠수함, 구축함, 상륙함 등 함정 9척도 동원되었다. 이 기간 동안 상륙 훈련, 대공 훈련, 대함 훈련, 대잠수함 전 훈련, 특수전 훈련, 기뢰 제거 훈련을 벌였다. (『중앙일보』 1995년 10월 13일자)

27) 18p 26줄 『한겨레신문』 1995년 9월 26일자.

28) 18p 26줄 Washington Post 1995년 9월 20일자 보도를 보면, 미국의 고위 관리들은 미국을 비롯한 28개 선진국들이 북(조선), 이란, 리비아 세 나라를 잠재 적국으로 규정하고, 이 나라들에 대해 무기 및 첨단 기술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대공산권 수출 통제위원회(Coordination Committee for Export to Communist Area)의 새로운 후속 체제를 창설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워싱턴, AFP 연합=『한겨레신문』 1995년 9월 21일)

29) 18p 30줄 『한겨레신문』 1995년 9월 25일자. 남(한국)의 군 관계자들은 미국이 남(한국)에 평시 작전 통제권을 돌려 주었다고 해도 남(한국)군은 독자적인 작전 계획 수립 능력이 없으며, 정보를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실토했다고 한다. (『조선일보』 1995년 9월 28일자)

30) 19p 2줄 『조선일보』 1995년 9월 25일자. 주한미군은 지난 1993년 게리 렉이 사령관직에 취임한 뒤로 ‘신속 전개 억제 전략’(Flexible Deterrence Option: 무력 충돌의 위기가 생기면 미 항공모함 기동 부대, 전투 비행단, 해병 원정군을 24-72시간 안에 긴급 배치하면서 외교적, 경제적 조치도 병행 수행하는 전략)을 더욱 강화했으며, 한(조선)반도에서 전쟁 위기가 포착되면 패트리어트 미사일, 에이타킴스(ATACMS) 신형 지대지 미사일, 각종 탄약 등을 긴급 배치한다는 전략 개념을 ‘전투력 증강’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신속 전개 억제 전략’은 외교적인 조치를 포함하는 다소 광범위한 개념이지만, ‘전투력 증강’은 군사적인 조치라고 한다. 미국은 1994년 봄 이른바 ‘핵문제’로 한(조선)반도에서 위기를 고조시키면서 ‘전투력 증강’ 전략의 초기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무렵 미국은 ‘전투력 증강’ 전략을 남(한국)에 알리지 않고 수행하였으며, 한·미 연합사에서도 남(한국)군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핵문제’ 대책 회의를 하였다고 한다. 한·미 연합군은 1995년 8월 95 을지 포커스 렌즈 합동 군사훈련에서 ‘전투력 증강’ 전략을 시험했으며, ‘신속 전개 억제 전략’보다 많은 전폭기 등 막강한 무력을 한(조선)반도에 배치하는 훈련을 벌였다고 한다. 그런데 한·미 연합사령관 리스카시가 남(한국)이 주한미군이 철수한 상태에서 북(조선)으로부터 야간 기습을 받았을 경우 남(한국)군은 서울을 잃은 뒤 오산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전쟁 게임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은 지난 1992년 초였으며, 이 제시를 통하여 남(한국)군에게 지상군 위주로 전력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제시와 촉구에 대해서 남(한국)군 내부에서는 워 게임(War Game) 결과란 컴퓨터 입력을 어떻게 하느냐를 따라 달라지는 데, 미국은 무기를 팔기 위해서 일부러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조작·제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조선일보』 1995년 9월 28일자) 군사평론가 지만원 씨의 견해를 따르면, 북(조선)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남(한국)의 안보문제를 ‘담보’로 잡고 있는 미국은 남(한국)에 대해 무슨 요구든지 할 수 있으며, 만일 남(한국)이 미국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언제나 북(조선)의 위협을 필요 이상으로 과장하여 위기감을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있다. 그가 “(미국은) 다른 독립 국가들에 대해서는 도저히 요구할 수 없는 불합리하고 비인격적인 요구까지도 (한국에 대해서) 서슴없이 강요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도 겪고 있지 않은가. 지금의 세계에서 어느 한 나라가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일면 정당한 비판으로 보인다. (『중앙일보』 1995년 9월 28일자)

31) 19p 9줄 이것은 그가 1996년 3월 19일 미 하원 아·태 소위가 이 해에 들어와 처음으로 열었던 조·미 관계 관련 청문회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조선일보』 1996년 3월 23일자)

32) 19p 19줄 『한국일보』 1995년 9월 20일자.

33) 19p 27줄 『조선일보』 1995년 10월 6일자.

34) 19p 29줄 세계 어디선가 전쟁이 일어나고 무력 증강이 촉진될 수록 활황을 맞게 되는 미 군수 산업 자본은 각 지역 선거구별로 자기들의 산업체를 거미줄처럼 분산 배치해놓았기 때문에, 만일 어떤 군수 산업 자본이 탈냉전 시기의 군비 감축 때문에 타격을 받고 문을 닫게 될 때는 그 지역 선거구에서 수많은 실업자가 생기게 되므로, 지역 선거구의 표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의원들은 당연히 군수 산업 자본의 요구와 주장을 의정 활동에 반영해야 한다. 군수 산업 자본을 중심으로 형성된 미국의 생산 체계를 민수 산업 자본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5) 20p 8줄 1995년 9월 15일 ‘재일본 조선인총연맹 제17차 전체대회’는 지난 1955년에 제정된 강령 내용 가운데 미국을 침략자로 규정한 부분을 삭제한 바있다. “우리는 조국의 주권과 영토를 침해하고 내정을 간섭하는 미제국주의자를 괴수로 하는 일체의 외래 침략자들을 철거시키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독립을 위하여 헌신한다”는 조항을 “우리는 전민족 대단결의 기치 아래 70만 재일동포들의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고 북과 남 해외동포들과의 민족적 유대를 강화·발전시키며 온갖 반통일 세력의 책동을 단호히 배격하고 연방제 방식으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성취하는 데 모든 힘을 다한다"고 한 강령수정(『중앙일보』 1995년 9월 18일자 보도)은 미국에 대한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조치여서 우리의 관심을 끈다.

36) 20p 12줄 이로써 남북이 모두 미국에게 '핵 개발권'을 양보하게 되었다. 남(한국)은 1970년대 말 박정희 정권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였지만, 미국의 강력한 반대로 좌절되고, 결국 박정희 정권이 몰락하였으며, 1980년 이른바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미국 한테 자기들의 정권 보장을 받아내기 위한 대가로 핵개발을 포기하고 말았다고 한다. (『조선일보』, 『한국일보』 1995년 10월 6일자, 『한국일보』 1996년 3월 7일자 참조) 이로써 미국은 적어도 한(조선)반도의 '핵무기 개발 능력'을 봉쇄하려는 반확산 정책(Counterproliferation Policy)에 관련하여 조셉 나이가 말한 이른바 영도 전략을 관철하는 데 일단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37) 21p 7줄 지난 197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베트남전 패배와 유엔에 대한 독점적 영향력 약화라는 치명상을 입었던 미국은 유엔에 가입한 비동맹 국가들과 사회주의 진영이 한(조선)반도의 평화 문제와 통일 문제를 자국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게 되자, 당시 포드 행정부의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는 1975년 9월 서둘러 이른바 코리아문제에 관한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제안하였는데, 이것은 남과 북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교차 승인을 염두에 둔 것이었고, 결국 코리아의 분단을 합법화·영구화하는 '두 코리아 정책'을 뜻하는 것이었다. (키신저의 4자회담 제안에 관해서는 "Proposed by Secretary of State Henry Kissinger for Four-power Korean Conference", [July 22, 1976]과 "Secretary of State Henry Kissinger's Remark on Korea at the 31st U.N. General Assembly", [September 30, 1976], Se-Jin Kim, ed., *Korean Unification: Source and Materials with an Introduction*, [Seoul: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1976], 416-418쪽, 420쪽 참조) 미국의 '두 코리아 정책'은 한(조선)반도를 겨냥한 봉쇄·대결 전략의 한 전개 단위였다.

38) 21p 10줄 일찌기 미국의 유도·편입 정책 내용을 비교적 솔직하게 밝혔던 전문가는 도널드 자고리아 교수(미 컬럼비아대 국제정치)일 것이다. 그는 1993년 1월에 발표한 한 기고문에서 북(조선)에 대한 미국의 고립화 전략은 미국이나 남(한국)에 모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북(조선)을 개방으로 이끌어내는 공동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가 말하는 공동 전략의 목표는 북(조선)으로 하여금 중국과 베트남 같은 경제 개혁 정책과 대외 개방 정책을 채택하도록 유도하고, 북(조선)을 핵무기 개발 중단 및 미사일 수출 중단, 유럽형 군축 및 전진 배치된 북(조선)군의 재배치 등으로 유도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북한이 세계 경제권으로 통합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인데, "북한을 태평양 경제권으로 편입시키는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일·중·러시아 등 태평양 정립 세력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북한을 보다 광범위한 지역 안보 협상에 끌어들이는 것이 미국과 한국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1993년 1월 7일자)

39) 21p 20줄 이 문제에 관련하여 조지 워싱턴대 동아시아 연구소장 김영진 교수가 "남한 정부는 북한측이 제의하고 있는 미·북한 장성급 군사 접촉을 반대하고 있는데 남북한 신뢰 구축을 위해서나 돌발 사건 발생에 대비한 해결 채널은 어떤 형태로든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남북 기본합의서에 이미 불가침 선언 조항이 들어있고 여기에 남북 군사공동위가 가동된다면 남한이 미·북한 간에 평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군사공동위가 가동되면 사문화된 군사정전위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평화 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지요"라고 한 지적(『동아일보』 1995년 9월 23일자)은 정당하다.

40) 21p 28줄 『한국일보』 1995년 7월 28일자.

41) 22p 5줄 '한·미 중장기 안보 대화'는 1995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에서 발족될 예정이며, 두 나라의 국방부 차관보급 접촉인 '고위 정책협의회'와 국·과장급 접촉인 '실무 위원회'로 이루어지는 회의체가 될 것이라고 한다. (『중앙일보』 1995년 9월 5일자, 『한겨레신문』 1995년 9월 3일자)

42) 22p 14줄 남(한국)의 외무부장관 공로명은 유엔을 방문하고 있던 1995년 10월 3일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은 마치 북한과 유엔 참전국 16개국 및 중국이 참여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관련국 간 평화 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을 비동맹 정상회의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1995년 10월 5일자) 다른 신문에서는 북(조선)이 이 회의에서 채택될 최종 선언문에 조·미 평화 조약 체결을 지지한다는 항목을 넣으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조선일보』 1995년 10월 5일자),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조·미 평화 조약 체결 지지가 아니라 한국(조선)전쟁에 참전했던 관련국들이 평화 의지를 천명하는 내용을 선언 형식으로 발표하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43) 22p 20줄 유엔을 방문하고 있던 남(한국)의 외무장관 공로명이 1995년 9월 25일 수행 기자 간담회에서 중국이 조·미 평화 협정 체결에 대해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이며, 불합리한 기도라고 비판했다고 밝힌 것(『동아일보』 1995년 9월 27일자)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중국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1995년 7월 말 부르나에서 열린 아시아 지역 안보 포럼(AFR)에서 있었던 한·중 외무장관 회담과 9월 25일 한·중 외무장관 회담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7월 말의 한·중 외무장관 회담에서 남(한국)은 이른바 '2+2 회담안'을 중국측에 제시하면서 지지를 얻어보려고 하였는데, 중국은 조·미 평화 조약 체결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도, 정전 협정은 한(조선)반도의 평화 유지에 긴요하다는 견해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남(한국)의 '2+2 회담안'을 우회적으로 거부했다고 한다. (『조선일보』 1995년 9월 27일자) 남(한국)이 1995년 8월 15일 '2+2 회담안'을 발표하여 대북 공세를 퍼려던 당초의 계획이 무산된 것은 중국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었다. 중국은 지난 6월 당정 고위 대표단을 북(조선)에 파견하여, 북(조선)의 새로운 평화 체계 수립을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일보』 1995년 9월 27일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중국이 북(조선)의 조·미 평화 조약 체결안과 남(한국)의 '2+2 회담안'에 대해서 모두 반대하지만, 북(조선)이 새로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평화 체계 수립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아직 밝혀진 바 없다. 중국이 조·미 평화 조약 체결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까닭을 중국이 한(조선)반도 평화 체계 수립과정에 직접적인 당사자로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지만, 중국은 직접 개입의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북(조선)·대만의 관계 개선 추세에 제동을 걸어보려고 하는 이해 관계의 문제가 얽혀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은 북(조선)이 이미 조·미 평화 조약 체결안을 포기하고 '새로운 평화 체계 수립안'을 추진하기 시작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볼 때, 남(한국)의 보수 언론들이 조·미 평화 조약 체결안에 대해 중국이 반대 견해를 표명했다는 것을 중국이 북(조선)의 의사를 반대하고 남(한국)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냐고 해석하는 것은 착각으로 보인다.

44) 22p 24줄 이러한 공식 요청 사실이 남(한국)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95년 10월 4일이다. (『세계일보』 1995년 10월 5일자) 이와 때를 맞춰 *Washington Times*는 미 상원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 존 길(공화당, 아리조나주)과 미 국방부 소식통이 전하는 미 국방정보국(DIA)과 탄도 미사일 방어기구의 분석, 그리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제3국의 정보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면서, 북(조선)이 2000년쯤 핵탄두 또는 화학·생물학 탄두가 장착된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미사일로 미 중서부 지역까지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세계일보』 1995년 9월 30일자) 10월 2일에 나온 남(한국) 국방부의 「1995-1996년 국방백서」도 북(조선)의 군사력 증강이 한(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방부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미국의 보수적인 연구 기관인 헤리티지재단 아시아 문제 연구소가 펴낸 「미국·아시아 통계편람」을 보면 1994년도 군사비는 남(한국)이 1백40억 달러(지난해 대비 16.1% 증가)고, 북(조선)은 겨우 23억 달러(지난해 대비 5% 증가)라고 한다. (『한겨레신문』 1995년 9월 14일자) 또한 남(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GDP)은 8천9백50 달러고, 북(조선)은 9백23 달러라고 한다. (『동아일보』 1995년 9월 15일자)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선임연구원 라빈터 팔 싱도 군사력은 "절대적으로 남한이 우위라고 본다"고 했다. (『한겨레신문』 1996년 1월 30일자) 군사비를 무려 6배나 많이 지출하고, 경제력이 무려 10배가 많은 남(한국)이 '북(조선)의 위협'을 말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논리다.



45) 22p 27줄 『세계일보』 1995년 10월 24일자.

46) 22p 30줄 1995년 9월 28일 당시 외무장관 공로명은 유엔회원국 기초 연설이 이어지고 있는 제50차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북한 당국이 개혁과 사회 개방을 통한 인권 보호를 요구하는 국제 사회의 호소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하면서, 이산가족 문제, 현 정권 협정 체제 유지문제, 남북 대화 재개 문제를 거론했다.

47) 22p 30줄 남(한국)과 북(조선)은 각각 두 차례씩 답변권을 얻어서 치열한 ‘인권공방’을 벌였다.

48) 22p 31줄 안승운 목사 사건에 대해서는 중국 당국이 안 목사의 입북 사건에서 강제성이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한국일보』 1995년 9월 19일자) 남(한국)은 1979년 노르웨이에서 입북했던 고상문 씨(당시 수도여고 지리교사)가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 중이라고 주장하면서 인권 문제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을 통하여 대북 대결 정책의 정치적 이용물로 삼아보려고 시도하였으나, 고 씨는 북(조선)에서 정착하여 지리학 연구사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며 돌아갈 의사도 없다고 남(한국)에 있는 자기 가족에게 서면 통보했으며, 이로써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은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끝내게 되었다. 이 사건의 발단은 1994년 7월말 김일성 주석의 급서 직후에 남(한국)이 대북 비난 공세를 퍼붓던 시기에 일어났던 일로서, 당시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가 자체 보고서를 통해 북(조선)의 강제 수용소에 정치범 55명이 있으며, 그 명단 가운데 고 씨의 이름이 들어있다는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발표한 것인데, 이번에 이 사건이 유엔 차원에서 마무리되어 결과적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하여 추진하려 했던 남(한국)의 대북 공세는 ‘전과’를 올리지 못한 실패작으로 보인다. 언론은 이번 사건 종결을 보면, 결국 “국제사면위가 공개한 북한 정치범 수용 실태도 신빙성에 의문을 갖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됐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겨레신문』 1995년 10월 13일자)

49) 22p 32줄 이것은 당시 외무장관 공로명이 1995년 10월 3일 뉴욕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이다. (『세계일보』 1995년 10월 5일자)

50) 23p 2줄 이번에 북(조선)이 제시한 안은 당국을 대표하는 직위가 아니라, ‘큰물피해 복구대책위원회의 위임에 의해 전금철’이라는 비당국 직위로 수재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지난번 쌀지원 합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위원회의 위임에 의해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고문 전금철’이라는 비당국 지위를 사용한 바있다.

51) 23p 4줄 한(조선)반도의 평화 체제 수립 문제를 남북 당국자 간의 협상으로 풀어야 한다는 남(한국)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 김영진 교수가 “제 생각에는 남북한 간의 평화 협정 체결은 이미 남북 기본합의서에 불가침 조항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필요없다고 봅니다.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정부 공식 성명을 통해 남북한 불가침을 지지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고 한 지적(『동아일보』 1995년 9월 23일자)은 정당하다.

52) 23p 7줄 『한겨레신문』 1995년 10월 1일자.

53) 23p 14줄 이것은 전금철 대외경제협력위원회 고문이 남(한국) 기자의 물음에 답변한 내용이다. (『한겨레신문』 1995년 10월 3일자)

54) 23p 16줄 안기부장 권영해가 1995년 10월 11일에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안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대미 유화 정책을 계속하면서 종래 미·일을 상정해 왔던 주적 대상을 남한으로 설정, 모든 외교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간 당국자 회담이 재개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같다고 분석했다”는 보도가 눈길을 끈다. (『조선일보』 1995년 10월 12일자)

55) 23p 24줄 New York Times 1995년 8월 31일자.

56) 24p 1줄 셀릭 해리슨(Selig S. Harrison)은 1972년 Washington Post 특파원으로 처음 방북하여 김일성 주석을 면담하였고, 그 뒤로 여러 차례 방북하여 당·정·군 고위급 인사들을 면담하였다. 현재 카네기 국제평화재단(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의 수석연구원으로 있으면서, 미 국방대학교(National Defense University), 미 전쟁대학(National War College), 미 국무부 산하 외교연구원(Foreign Service Institute) 등에서 강의하고 있다. 그는 또한 미 의회의 동아시아 문제 관련 위원회들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미국의 주요 신문,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 대담에 출연하여 동아시아 문제를 해설하는 등 미국과 남(한국)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지난 30여년 동안 미국과 동아시아 관계 부문에 관련하여 저서 다섯 권을 낸 그는 이 부문에서 정상급 권위자로 인정 받고 있다.

57) 24p 4줄 이 내용은 『중앙일보』 1995년 9월 28일자, 『한겨레신문』 1995년 10월 4일자, 『월간 말』 1995년 11월호에 실린 바있다.

58) 24p 7줄 미 국방부 보고서의 공식 명칭은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이다. 그 주요 내용은 주한미군 제2단계 감축 계획을 완전히 폐기하고 현 수준에서 10년 동안 유지한다는 것, 주한미군, 주일미군, 미 제7함대의 해상 지원 병력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진 배치 병력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 동북아시아 다자간 안보협의체를 창설한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지』 1995년 1월 23일자, Joseph S. Nye Jr., 앞의 글, 90-102쪽 참조.)

59) 24p 8줄 미국의 새로운 동아시아 전략 구상에 대해서 일본도 발빠르게 대처하여 1995년 11월 28일 ‘신 방위 대강’ 최종안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미국과 일본은 ‘새로운 아시아·태평양 전략 구상’과 ‘신방위 대강’의 기본 구도를 종합한 ‘새로운 안보 공동 선언’을 1995년 11월 미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발표하기로 했으나, 미국의 사정으로 연기되었고, 1996년 4월 도쿄 미·일 정상회담에서 발표하였다.

60) 24p 31줄 『한겨레신문』 1995년 10월 4일자. 미국은 자국의 사활적 이해 관계가 점증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자국의 전진 배치 무력을 감축하지 않을 것이다. Defense News 1995년 9월 11일자의 특집 보도는 미국 태평양 사령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군사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와이 사령부에 아·태 안보 전략 센터를 창설하고, 연례적인 대규모 합동훈련 대신 이 지역 여러 나라들이 참여하는 소규모 합동군사훈련을 더 늘릴 계획이라는 사실과 10월 7일 미 해군, 해병대가 ‘아시아 원탁회의’를 열고 오는 2015년까지 동아시아 정세를 분석하고 이 지역에 주둔하는 해군과 해병 군사력을 수정 배치할 필요성을 논의한다고 전하고 있다. (『동아일보』, 『중앙일보』 1995년 9월 13일자) 미국의 랜드 연구소(RAND Corporation)가 도출한 6가지 아·태지역의 군사 태세 시나리오에 관한 보도도 눈길을 끄는데, 한국전략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전략연구』에 발표한 연세대 문정인 교수의 글에 정리되어 있다. (『세계일보』 1995년 9월 9일자) ‘태세 A: 냉전기 전력’은 7개 함포 전투단, 3개 보병사단, 2개 해병 원정군, 5개 전술 공군비행단으로 유지하는 전력이고, ‘태세 B: 기반 전력’은 태세 A보다 15% 감축된 상태로 해외주둔 지상군 및 지상 배치 공군력은 감축하지만 주요 전투조직은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전력이고, ‘태세 C: 해외 기지 감축 전력’은 태세 B와 비슷한 전력 규모를 유지하되, 남(한국)과 일본의 배치 전력을 팜, 하와이, 알래스카로 철수하고, 다른 지역 철수 병력은 미 본토에 배치하는 상태다. ‘태세 D: 태평양 스윙 전략’은 태세 B와 비슷하나 중동 지역에서 우발적인 상황이 일어나면 태평양 전력이 부분적으로 동원되는 시나리오로서, 해·공군 및 해병대는 미 본토와 일본에서 신속히 중동 지역으로 배치되지만 주한미군 전력은 태세 B와 비슷하게 남는다. ‘태세 E: 국방 예산 감축 전력’은 태세 A보다 35% 감축된 상태로, 해외 주둔 기지에는 해·공군 전력이 배치되고, 남(한국)에는 전술 공군비행단과 1개 보병여단만 남게 된다. ‘태세 F: 국방 예산 절감 스윙 전략’은 태세 A보다 35% 감축되고, 태세 D와 태세 E가 혼합된 형태로서, 남(한국)과 일본의 2개 전술 공군비행단, 남(한국)의 1개 보병여단을 제외하고 대부분 병력이 철수하는 시나



리오라고 한다. 이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공통된 점은 미국이 어떠한 경우에도 한(조선)반도에서는 해·공군 무력은 물론이고 지상군 무력을 철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북(조선)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심부인 동북아시아, 그리고 그 중심점인 한(조선)반도에 전진배치한 무력에 대한 미국의 완강한 태도와 고정 불변의 전략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 인식을 기초로 하여 대미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61) **25p 5줄** 1989년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렸던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주최의 세미나 “코리아의 긴장 완화”에서 김정수 부소장(당시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1996년 현재 유엔북[조선]대표부 부대사)을 대표로 하는 북(조선) 대표단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한(조선)반도의 자주권 문제로 인식하면서, 주한미군 철수와 남북의 상호군비 감축을 동시 병행하자는 제안을 재확인한 바 있다. *Dialogue with North Korea, Report of a Seminar on “Tension Reduction in Korea”,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1989) 9쪽.* 레이건 행정부 시절 대통령 특별 보좌관이었으며, 현재 미국 카토 연구소(Cato Institute)의 소장 테드 갤런 카펜터와 선임연구원 더그 밴도는 가능한 한 빨리 주한미군 철수를 시작해서 4년 안에 끝내야 하며, 철수 직후 미국은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Doug Bandow and Ted Galen Carpenter, eds., *The U.S.-South Korean Alliance: Time for a Change*, [New Brunswick, New Jersey: Transaction, 1992], 참조)

62) **25p 8줄** 이 문제에 관하여 김일성 주석은 198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를 통해 “우리는 조선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꿀 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협상할 것을 미국에 다시 한 번 제의합니다. (출입) 미 당국자들은 이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이며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우리의 정당한 제의를 받아들이며 남조선에서 자기의 군대를 하루빨리 철거함으로써 미국 인민을 포함한 세계 인민들의 일치한 념원과 의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미국의 ‘두개 조선’ 조작 책동을 저지시키며 조선의 내정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끝장내야 합니다”고 말한 바 있다. (『김일성 저작집 35』,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7년], 344-345쪽)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오늘 한(조선)반도의 정세는 근본적으로 변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된 정세에 맞게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한 북(조선)의 시각도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문정인 교수는 “주한미군이라는 제3자적 개입 변수가 완전히 해소된 뒤에야 진정한 의미의 남북한간 신뢰구축, 군비통제, 그리고 군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문정인, 「남북한 신뢰구축-그 가능성과 한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편,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 [경남대학교출판부, 1992], 213쪽) 그렇지만 주한미군 주둔이라는 ‘개입 변수’ (사실은 ‘개입 상수’라고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를 해소하는 방안을 꼭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문제를 선행해야 한다는 주장으로만 국한해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탄력성 있는 논리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63) **25p 12줄** 김용순-아놀드 캔터 회담에서 북(조선)의 주한미군 주둔 용인론이 나왔다는 사실은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1992년 7월 5일 『요미우리신문』에 실려 외부에 알려진 바 있다.

64) **25p 15줄** 『요미우리신문』 1992년 6월 24일자 보도. 리삼로 대표의 연설문은 Li Sam Ro, “The Reunification of Korea and Peace and Security in Asia”, Amos A. Jordan ed. *Korean Unification: Implications for Northeast Asia*,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Significant Issues Series, Volume XV, Number 7, 1993), 29-34쪽에 실렸다. 리삼로 대표는 그 뒤에도 『동아일보』와 가진 단독 회견에서 “주한미군은 통일 과정에서는 단계적으로 철수할 수 있지만 통일 이후에는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고 말하며 주한미군 장기 주둔 용인론을 재확인한 바 있다. (『동아일보』 1992년 11월 9일자) 통일 전까지 주둔을 용인한다는 발언과 통일 뒤에도 주둔을 용인한다는 발언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엿보인다.

65) **25p 17줄** 1954년 정전협정의 규정을 따라 제네바에서 열린 한국(조선)전쟁 전후 처리 회담에서 북(조선)은 남북에서 외국군을 철수할 것과 1년 안에 남북 병력을 각각 10만명 아래로 줄이자는 군축안을 내놓았으며, 1965년 8월 15일 김일성 주석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핵심으로 하는 군축안을 제안했다. 이러한 주한미군 철수안은 1980년대 말까지 모두 2백36차례나 제기되었다.

66) **25p 18줄** 1987년 7월 23일 발표한 ‘단계적 무력 감축 방안’이다. 이 제안은 1988년부터 1991년까지 3년 동안 3단계에 걸쳐 남북 쌍방 병력을 10만명으로 줄이고, 1992년부터 10만명 이하로 유지할 것, 주한미군도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하며 핵무기와 다른 무력들도 철수할 것 등을 담고 있다. 이러한 단계적 철수안은 1988년의 ‘포괄적 평화 방안’에서, 그리고 1990년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에서 더욱 명료화·구체화되었다.

67) **25p 18줄** 지미 카터가 1994년 6월 18일 CNN 방송과 가진 회견의 내용에는 그가 6월 11-18일 방북했을 때 김일성 주석과 접견한 내용 가운데서 김 주석이 카터를 통해 미국에 제안한 군축안이 나온다. 카터는 “(김일성 주석의 말은) 남북이 각각 군대를 10만으로 감축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는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과거의 요구를 계속하지 않았다. 그 대신 남북 군대를 감축하는 것과 같은 비율로 주한미군도 감축하면 된다는 의사를 나타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보다 먼저 재미 언론인 문명자 씨와 가진 회견에서 김일성 주석은 “단계적으로 무력을 축소한 뒤 조선반도의 자주적 방위가 가능해지면 미군이 철수하라는 것이지 즉각 미군이 나가라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1994년 5월 20일자) 이러한 단계적 철수안은 북(조선)이 1987년 7월 23일 발표한 ‘단계적 무력 감축 방안’에서 출발하여 1990년에 나온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 제안’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68) **25p 25줄** 문정인, 앞의 글, 203쪽.

69) **26p 4줄** 통일의 역사적 실현 경로를 전망할 때, 분단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직 통일도 이루어지지 않은 탈냉전적·완충기적 중간 상태를 만일 반드시 거쳐야 할 경로라고 한다면, 이 경로를 국가연합 단계의 통합 방안으로 규정해야 하는가 아니면 연방국가 단계의 통합 방안으로 규정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국가형태론의 시각에서 평가하자면 국가연합 단계나 연방국가 초기 단계는 서로 차별성이 없는 거의 동질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다. 1991년 미국을 방문한 북(조선) 외교부 한시해 부부장(현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은 “우리는 남북의 현존하는 실체를 당분간 그대로 둔 느슨한 연방국가를 구상하고 있다. 남북 양측은 독자적으로 군사 문제와 외교 관계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며, 연방국가는 조절 기능에 국한될 것이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것은 1991년 6월 5일 워싱턴에서 열린,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주최 심포지움의 환영 만찬에서 한시해 부부장이 한 연설내용임. Selig S. Harrison, “Confederation or Absorption?: Key Issues for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eoul: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 1993], 104쪽에서 다시 옮김. 번역은 인용자가 한 것임.) 이러한 내용은 국가연합 단계와 차이가 없다. 다만 가장 중요한 차이점으로 나타나는 것은 남북의 당국자가 상대방을 서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상호 국가 승인 문제다. 국가연합 단계는 남북이 정치적으로 합의하여 두 개의 국가로 갈라서는 분단국가 실체의 상호 인정 과정을 거쳐서, 두 독립국가를 특수한 관계로 결합한 단계를 말한다. 연방국가 초기 단계란 남북이 서로를 국가적 실체로 인정하지 않고, 현재의 분단 질서를 변화시켜 특수한 관계로 결합한 단계를 말한다. 앞으로 완충기적 중간 상태가 만일 국가연합 단계로 확정된다면, 한(조선)반도는 두 개의 국가로 영원히 갈라지고마는 분단의 영구화·합법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남북이 정치적 합의를 통해 서로를 국가적 실체로 상호 인정하게 된다고 해서 통일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민족 내부에서 법리적으로 분단 질서를 인정하는 결과만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이다. 남북의 당국자들이 진정으로 통일을 실현하려 한다면 남북 당국이 서로를 법적으로 두 개의 국가로 인정하여 분단 질서를 법적으로 정당화하는 국가연합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할 필요는 전혀 없으며, 국가연합 단계와 그 형식 및 결합 수준이 대동소이한 연방국가 초기 단계로 들어가면 될 것이다.



70) 26p 8줄 미국은 평화 조약 체결 문제에 관해서는 법적 당사자이지만, 한(조선)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실질적 당사자 가운데 일방이면서도 통일 문제 해결의 '법적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통일 문제에 관해서는 정치적 지지자의 지위를 가지게 될 것이다.

71) 26p 23줄 『로동신문』 1996년 1월 10일자.

72) 26p 29줄 북(조선)의 평화 체제 수립론에 점진적, 단계적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외부에 알려진 것은 1995년 1월이다.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평양을 방문한 조지 워싱턴대 동아시아 연구소 대표단의 방북 성과를 설명하는 특별 기고문에서 이 연구소 소장인 김영진 교수는 "북한의 외교 및 통일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고위 인사들은 현 시점에서 평화 협정이 불가능할 경우 '중간적인 조치'를 검토해보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그 중간 조치라는 개념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미국이나 한국에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인지 연구해볼 과제다"고 적었다. (『동아일보』 1995년 1월 26일자) 조지 워싱턴대 동아시아 연구소는 10여년 전부터 북(조선) 외교부 산하 군축평화연구소와 학술 교류를 추진해왔는데, 지난 2년 동안 정세 변화로 중단되었던 학술 교류를 그때에 다시 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그 대표단에는 제임스 릴리(전 주한미국대사), 돈 오버도퍼(전 워싱턴 포스트 지도교 지국장), 토켈 패터슨(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부장) 등 '실력자'들이 참가했다고 한다.

73) 27p 1줄 이것은 '실무 협의체'가 아니라, 영어개념에 선명하게 표현되었듯이 '상호 안보협의위원회'(초기 단계에서는 낮은 수준의 상호 안보협의체일 것이다)라고 보아야 한다. 북(조선)의 외교부 대변인 담화에서는 '조미 공동 군사기구'라는 표현도 쓰고 있다. (『로동신문』 1996년 2월 23일자 참조)

74) 27p 4줄 그는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수석대표다.

75) 27p 6줄 『중앙일보』 1995년 9월 28일자. 그 무렵 남(한국)의 군부는 '1996년도 국방정책'을 발표하면서 하와이 조·미 유해 협상 이외의 어떠한 조·미 군부 접촉도 반대한다는 내용을 삽입한 것을 보면,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는 언론의 분석(『시사저널』 1996년 1월 25일자)으로 미루어보아 극력 반대했을 가능성이 높다.

76) 27p 9줄 남(한국)의 국방장관은 조·미 장성급 회담이 성사될 경우 당사자 해결 원칙에 기초한 남북 기본합의서가 사문화되고 남(한국)은 국외자로 격하된다는 내용의 공한을 게리 럭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보냈다고 한다. (『중앙일보』 1996년 3월 30일자) 이 기사에서는 남(한국)이 반대 공한을 보낸 시점을 약 두 달 뒤인 11월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것은 착오가 아니면, 그러한 반대 공한을 여러 차례 보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실제로 같은 기사에서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남(한국) 정부가 이 조·미 장성급 회담 개최에 대해 반대 의사를 여러 차례에 걸쳐 분명히 했다고 밝히고 있다. 게리 럭을 비롯한 주한미군 고위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주한미군은 1996년 2월 「북한 하부구조 붕괴유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미 국방부와 백악관의 고위관리들에게 제출했으며(『조선일보』 1996년 3월 26일자), 게리 럭은 미 의회 청문회에 나가서 북(조선)의 붕괴는 시기와 방법의 문제만 남아있다고 발언했다는 사실은 미국의 군부와 주한미군 고위 관계자들이 조·미 장성급 판문점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인다. 붕괴하고 있다고 판단한 상대측을 대화 상대로 설정한 까닭은 무엇일까?

77) 27p 15줄 『시사저널』 1995년 12월 7일자, 1996년 1월 25일자.

78) 27p 24줄 조·미 협상 문제에 관련하여 미국은 이중적 태도로 나오고 있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윈스턴 로드는 1996년 3월 29일 워싱턴으로 중계된 워싱턴과 서울 사이의 화상 대담에서 "우리는 언제나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에 반대해왔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이같은 입장을 지켜왔으며, 지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킬 것이다. 남북간 직접 대화를 미확은 지지한다. 정전 협정을 대신하는 평화 협정 체결문제를 북한과 직접 논

의하지 않았다. 남북한간 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은 지난 91년 남북한이 체결한 남북한 기본합의서 틀에 따라 정전 체제 변경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평화 협정은 남북한 사이에 논의될 문제이며 이행 과정에서 현행 정전 체제는 존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1996년 3월 30일자) 이것은 조·미 장성급 판문점 회담 개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현실과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발언이다. 그의 태도가 이중적이라는 사실은 그가 열흘 전인 3월 19일 미 하원 동아·태 소위에 나와서는 "북한이 정전 협정을 무시하고 휴전선에서 미국측과 군사 대화를 하지 않는 등 대화가 단절된 상황은 위험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을 위한 대북한 대화 확대를 주요 정책의 하나로 삼고 있다" (『중앙일보』 1996년 3월 21일자)고 말한 데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이중적 태도의 저의는 무엇일까?

79) 27p 26줄 『중앙일보』 1996년 3월 30일자.

80) 27p 30줄 『로동신문』 1996년 2월 23일자.

81) 28p 1줄 북(조선)은 1996년 3월 8일 판문점 인민군 대표부 비망록을 발표하고, 미국이 잠정 협정 체결 제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전 체제를 새로운 장치로 바꾸기 위한 최종적이고 주동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1996년 3월 11일자) 북(조선)은 1996년 3월 중순 유엔 안보리에 보낸 공한에서 "만약 미국이 평화 협정 제의에 응하기를 거부하고 시일을 계속 지연시킨다면 우리는 정전 협정을 '새로운 장치'로 대체하기 위한 최종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달리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세계일보』 1996년 3월 22일자)

82) 28p 9줄 『월간 말』 1995년 11월호, 74쪽.

83) 28p 12줄 『조선일보』 1996년 5월 1일자.

84) 28p 27줄 이것은 영국 런던에 있는 국제전략연구소(IISS)가 1996년 1월 25일 발표한 연구보고서 「아시아·태평양에서의 미국의 전략」에서 지적한 내용이다. (『한겨레신문』 1996년 1월 27일자)

85) 28p 31줄 '포괄적 안보'라는 개념은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이, 특히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제기한 개념으로서 비군사적 차원까지 포괄하는 안보개념을 뜻한다. 이 글에서는 조·미 관계 개선과 함께 한(조선)반도에 대한 미국의 안보 개념이 군사 일변도에서 포괄적 차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포괄적 안보'라는 개념을 썼다.

86) 28p 32줄 최근 미국과 남(한국)의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 균형자(regional balancer)논의도 여기에 포괄될 수 있을 것이다.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서주석은 1995년 11월 군내부 정기 간행물인 「주간 국방논단」에서 주한미군이 주둔하되 외부 위협이 소멸할 때는 상징적 규모로 축소될 수 있는 한·미 군사 동맹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이러한 새로운 방향 전환을 "제한적 동맹"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주한미군의 대부분이 철수해 평상시 연합 방위 체제는 해체된 가운데 현재 미·태국 사이에서, 또는 미·호주 사이에서 정기적 및 부정기적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조선일보』 1996년 1월 2일자)

87) 29p 9줄 『월간 말』 1995년 11월호, 76쪽. 고 김일성 주석은 1993년 4월 10일 한 재미동포 학자와 나는 담화에서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을 새로운 각도에서 해석하면서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다. "미군이 남조선에서 철수하지 않는 목적은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는 데도 있다고 봅니다. 미국 사람들이 중국과 일본은 대국이기 때문에 견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자면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미국과 회담을 하게 되면 미군이 남조선에서 남아있는 진짜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따져보자고 합니다." (『김일성 저작집 4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170쪽)



88) 29p 14줄 이 공동 연구는 1992년 제24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에서 추진할 것을 합의했고, 지난 1994년 중간 연구 결과가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에서 보고되었으며, 1995년 10월 제25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에서 최종 결과가 보고되었다고 한다. 그 내용은 고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었는데, 무슨 까닭인지 1996년 1월 17일 남(한국)의 국방부가 언론에 대략적인 내용을 내보냈다.

89) 29p 15줄 「조선일보」 1996년 1월 18일자.

90) 29p 20줄 「한국일보」 1996년 1월 18일자.

91) 30p 10줄 미국이 집단 안보 전략을 무력 행사 방식으로 수행한 첫 실험장은 불행하게도 한국(조선)전쟁이었다. 정전 협정이 체결된 뒤, 1953년 8월 28일자로 발표한 '코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군에게 경의를 표하는 유엔총회의 결의문'(Resolution of the U.N. General Assembly Paying Tribute to U.N. Forces in Korea)에서 유엔은 "집단적 군사 조치", "유엔 휘하의 집단 안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 결의문은 유엔 총회의 Official Records: Seventh Session, Supplement No. 20B [A/2361/Add.2] 2쪽에 실려있음. Kim Se-Jin ed. 앞의 책, 182쪽에서 다시 옮김) 냉전 시기 미국의 집단 안보 전략이 억지(deterrence)와 봉쇄(containment)라는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면, 탈냉전 시기의 협력안보라는 새로운 전략은 이 두 개념에 재보장(reassurance)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더하여야 하며, 재보장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대외 정책을 밀고 나가야 한다는 점이 논의되고 있다. '협력 안보'라는 개념은 원래 오스트리아 외무장관 에반스(Gareth Evans)가 제기한 것인데, (Gareth Evans, *Cooperating for Peace: The Global Agenda in the 1990s and Beyond*, [Sydney: Allen & Unwin, 1993] 협력 안보론은 결국 관여·확장 전략과 맞물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 전략 수립가들이 이 문제에 관해 최근 벌인 집중적인 논의는 Ashton B. Carter, William J. Perry, John D. Steinbruner, *A New Concept of Cooperative Securit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1992)와 Janne. E. Nolan, ed. *Global Engagement: Cooperation and Security in the 21st Centur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1994)를 참조할 것.

92) 30p 11줄 유럽 안보협력회의는 1973년 7월 헬싱키에서 회담을 시작하였고, 1975년 8월 '헬싱키 최종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 합의서는 국가 간의 관계에 관한 10대 원칙, 신뢰 구축과 군축을 포함한 안보 문제, 경제·통상·과학기술 및 환경 분야의 협력, 인도주의적 접촉, 정보 교환, 교육·문화 교류 등의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1989년 3월 빈에서 열린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협상'이 이어져 오다가 1990년 11월 파리 정상 회담에서 '파리 현장'을 채택하면서 협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신뢰·안보 구축 조치(confidence-and security-building measures)에 관한 비엔나 협정, 공공 협약(Open Skies Treaty)에 관한 협정, 군사 교리 세미나 개최, 신뢰·안보 구축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통신망 설치, 안보 협력 포럼(Forum for Security Cooperation) 개최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유럽 안보협력회의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협력안보 체제 창설 문제에 던져주고 있는 의의에 대해서는 Trevor Findlay, "The European Cooperative Security Regime: New Lessons for the Asia-Pacific", Andrew Mack and John Ravenhill eds. *Pacific Cooperation: Building Economic and Security Regimes in the Asia-Pacific Region*, (Boulder: Westview Press, 1995), 224-232쪽을 참조할 것.

93) 30p 25줄 미 국방대학은 1996년 3월에 발표한 「전략 평가 96」에서 "북한의 안보 위협 완화를 전제로 동아시아 주둔 미군의 감축을 제의하였다"고 한다. (워싱턴=교도 연합, 「한겨레신문」 1996년 3월 17일자) 이러한 제의는 비록 「동아시아 전략 보고서」가 동아시아 주둔 미군의 현상 유지를 확정된 바 있으나,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조·미 관계 개선과 주한미군 감축이 병행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을 밝혀주는 사례가 된다고 볼 수 있다.

94) 30p 31줄 이러한 논리는 일관성을 가지고 되풀이되고 있다. 이를테면 1996년 「공동사설」에서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통일을 실현하는 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는 우리와 미국 사이에 새로운 평화 보장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우리와 미국 사이에 새로운 평화 보장 체계를 세우면 조선반도 정세는 완화되고 북남 합의서의 리행도 순조롭게 될 것이며 조국통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고 했다. (「로동신문」, 신문 「조선인민군」, 「로동청년」 1996년 1월 1일자 공동사설 「붉은 기를 높이 들고 새해의 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자」에서 다시 옮김)

95) 31p 1줄 이것은 1996년 2월 22일에 발표한 북(조선) 외교부 대변인 담화 「미국은 우리의 새로운 평화 보장 체계 수립을 위한 제안에 긍정적으로 응해 나와야 할 것이다」(「로동신문」 1996년 2월 23일자)에 나온 귀절이다.

96) 31p 3줄 북(조선)이 통일 문제와 군축 문제를 하나의 인식틀에서 보고 있다는 사실은 '조국통일 5대 강령' 제시(1973년 6월 23일), 최고인민회의 결의문(1984년 1월), 정부 성명(1986년 6월), '단계별 다국적 군축협상' 제의(1987년 7월 23일), '포괄적 평화 방안' 제의(1988년 11월 7일),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 제안 10개항' 발표(1990년 5월 31일) 등 지난 30년 동안 계속된 2백38차례에 이르는 신뢰 구축 및 군축 관련 제안들이 한결같이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합의·천명한 조국통일 3대 원칙 가운데 '평화통일의 원칙'에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밝혀진다. 이에 반해 남(한국)의 군비 통제 관련 제안은 60여 차례에 이르고 있다. (이석호, 「북한의 군비통제 정책」, 「국제정치논총」제29집 1호, 김창수, 「한국의 한반도 긴장 완화 방안」, 통일원 편, 「한반도의 군축과 평화」, 참조할 것.)

97) 31p 9줄 여기서 말하는 미국 관·군·산 복합체의 이익이란 새로운 무기 생산과 잉여 무기 판매로 챙기는 막대한 이익을 말한다. 셸리 해리슨은 한 일간지의 기고문을 통해서 한(조선)반도에서 정전 체제를 평화 보장 체제로 바꾸는 문제와 군축 문제를 서로 연결시키면서 현재 이 문제에 관해 미국 정부 및 학자들 사이에서 이미 '조심스런 논의'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가 말하는 조심스런 논의는 유럽 지역의 재래식 전력 감축에 관한 미·소 협정에 협상 대표로 참가했고 지금은 핵무기 해체 및 폐기를 러시아와 협상하고 있는 미 대통령 특사 제임스 굿비와 전에 주한미군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군 대령 윌리엄 드레넌이 미 국방대학에서 펴내는 *Strategic Forum* 1995년 5월호에서 내놓은 제안을 말한다. 그 제안은 비공격적인 방어에 기초한 남북 재래식 전력의 재편과 주한미군 병력 및 장비의 병행 감축인데, 이러한 군비 감축 과정을 감독하고 점검하기 위해 수립될 새로운 구조는 현 정전 협정 체제를 대체하거나 수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셸리 해리슨의 기고문 「정전 협정과 평화 보장」 「한겨레신문」 1995년 7월 24일자) 제임스 굿비의 한(조선)반도 군축 문제에 관해서는 James E. Goodby, "Operational Arms Control in Europe: Implications for Security Negotiations in Korea", *The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II, no. 1 (Summer 1990), 111-126쪽.

98) 31p 10줄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 계획은 미국의 정계와 군부, 정보 기관과 언론을 비롯한 보수 세력들이 앞장서서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완강하게 반대하여 발목을 붙잡았고, 결국 1979년 7월 20일 주한 미2사단 병력 철수계획을 중지하고 말았던 경험이 있다. (「한국일보」 1995년 11월 30일자)

99) 31p 13줄 하와이에서 조·미 정치·군사 협상이 '유해 발굴 및 송환'이라는 매개점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과 같은 때인 1996년 1월 8일-9일 베이징에서 한·미·일·중·러 5개국 '동북아 협력대화'(NEACD) 제4차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는 북(조선)도 초청을 받았지만 참석을 거부했다. 이 회의는 5개 나라 정부 및 군 관계자들, 민간 학자들이 참석하였는데 1993년 10월 제1차 회의를 연 바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 동안 회의의 성과를 발전시켜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인 '동북아 다자간 안보대화'(NEASED)를 발족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남(한국)의 외무부 당국자는 "NEASED는 가상적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냉전 시대의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나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다르다. 이 점을 강조함으로써 북한까지 이 체제에 끌어들이 동북아판 유럽 안보협력기구(OSCE)를 구축한다는 것이 5개국의 장기적 구상이다"고 밝힌 바있다. (「중앙일보」 1996년 1월 8일자)



100) **31p 27줄** 미국은 1996년 상반기 중에 북(조선)의 스커드 미사일 수출 문제와 관련하여 조·미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한 남(한국) 당국의 한 소식통의 발언이 보도에 나온 적이 있었다. (『조선일보』 1996년 1월 2일자) 이러한 사실은 1996년 4월 24일과 25일 제네바에서 조·미 미사일 회담이 개최될 것이라고 밝힌, 조·미 관계에 정통한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의 발언으로 연결되었다. (『중앙일보』 1996년 3월 1일자)

101) **31p 33줄** 3자 회담 문제는 카터 행정부 시절인 1976년 8월 미 국무장관 사이러스 밴스(Cyrus Vance)가 북(조선)에 제안했으며, 1978년 5월 미 대통령 안보담당 보좌관 브레진스키(Zhigniew Brezinski)도 3자 회담은 미국의 정책 목표임을 남(한국) 당국자에게 개인 견해라고 하면서 밝힌 바 있으며, 1979년 7월 카터의 방한에 즈음하여 나온 한·미 공동 성명에서도 천명된 바 있다. 북(조선)의 허담 외상(당시)은 1984년 1월 2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 제출한 보고에서 “1983년 9월 미국은 조선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공화국과 회담을 가질 의사가 있으며, 이 회담에는 남조선도 참가하도록 해야 한다는 뜻을 제3국을 통하여 비공식으로 제안하였습니다”고 밝힌 바 있다. (『로동신문』 1984년 1월 26일자) 레이건은 1983년 11월 방한 중 국회 연설을 통해 미국은 남(한국)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하지 않으면 북(조선)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허담 외상은 이러한 미국의 3자 회담 제안을 받아들이며, “미국이 우리의 3자 회담 제안을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로동신문』 같은 날 짜)고 말한 바 있다. (Harold Hakwon Sunoo, *Peace and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Beverly Hills, Los Angeles: Research Association for Juche Idea in U.S.A., 1989], 277-278쪽 참조.)

102) **32p 5줄** *Washington Post* 1995년 9월 28일자.

103) **32p 16줄** 『월간 말』 1995년 11월호, 77쪽.

104) **32p 20줄** 유엔군 사령부는 1957년 도쿄에서 서울로 옮겨왔다. 극소수의 직원은 후방 사령부 형태로 아직도 일본에 남아있다고 한다. 유엔군 사령부는 1978년 한·미 연합사가 창설될 때 세운 사령부 건물 안에 들어 있다. 주한미군 및 미 8군 사령부는 그 맞은편 건물에 들어 있다. 유엔군 사령부는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 사령관인 미 육군 대장이 그 사령관직을 맡고 있으며, 부사령관도 미 제7공군 사령관(미 공군중장)이 맡고 있고, 참모장 겸 유엔군 지상군 사령관직(유엔 지상군 병력은 실제로 없다)은 한·미 연합사 참모장(주한미군 참모장 겸 미 육군중장)이 맡고 있다. 유엔군 사령부는 군사정전위원회와 판문점 경비부대, 9개 나라에서 파견 나온 연락 장교들과 남(한국)군 연락 장교들로 이루어져 있다. 1950년 7월의 ‘작전 지휘권 이양 공한’과 1954년 11월에 체결된 ‘한·미 합의 의사록’의 “유엔 사령부가 대한민국 국군을 동 사령부의 작전 통제 하에 둔다”고 한 규정에 의거하여 종전에는 유엔군 사령관이 정전 업무와 작전 통제권 및 군사 지휘권 행사(주한미군과 남(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 및 군사 지휘권)를 모두 맡았는데, 1978년 한·미 연합사가 창설되면서, 유엔군 사령부가 장악하고 있던 작전 통제권 및 군사 지휘권을 가져갔기 때문에 현재 유엔군 사령부는 종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단지 정전 업무만을 관장하는 ‘간판’ 사령부가 되었다. 그러나 정전 업무마저도 군사정전위원회의 기능 마비로 수행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 유엔 사령부의 해체는 공식적으로 유엔 안보리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유엔 사령부를 미국이 장악해왔으므로 그 해체 문제도 실제로는 미국의 손에 달려 있다.

105) **32p 21줄** 1975년 11월 18일 제2409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코리아에 관한 유엔 결의안’ (The U.N. Resolution on Korea)은 이렇게 되어 있다. “유엔 총회는 (출임) 1972년 7월 4일의 공동 성명에 나타난 정신을 따라서, 그리고 그 공동 성명을 환영한 1973년 11월 28일의 유엔 제2080차 총회가 채택한 결정을 따라서 코리아의 남과 북이 나라의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대화를 시작하기를 희망한다. 항구적 평화는 현존하는 정전 상태가 코리아에 존속되는 한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코리아에서 항구적 평화를 보장하고 코리아의 자주적,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내정 문제에 대한 외부 간섭을 끝내기 위한, 그리고 그 지역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결정적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1. ‘유엔 사령부’를 해체하는 것이 필요하며, 남코리아에 유엔의 깃발을 달고 주둔하고 있는 모든 외국 군대를 철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2. ‘유엔 사령부’를 해체하고, 남코리아에 유엔의 깃발을 달고 주둔하고 있는 모든 외국 군대를 철수한 상황에서 코리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서 코리아의 군사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대체할 것을 정전 협정 당사자들에게 촉구한다.”

106) **32p 23줄** 주한미군 주둔의 법적 근거는 한·미 상호방위조약(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미 국무장관 존 포스터 델레스와 외무장관 변영태가 조인하고, 1954년 1월 26일 미 상원이 비준하고, 1월 29일 남(한국) 국회가 비준하고, 2월 5일 미 대통령이 비준하고, 11월 17일 워싱턴에서 비준서를 교환하면서 발효되었으며, 12월 1일 미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선포한 조약)이다. 이 조약 제4조는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The Republic of Korea grants,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cepts, the right to dispose United States land, air and sea forces in and about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고 규정하고 있다. (두 나라 글로 된 위의 해당 조약문은 미 국무부의 *Publication 5720*에서 다시 옮긴 것임)

107) **32p 25줄** 태국 주재 북(조선) 리삼로 대사는 1996년 3월 중순 방콕의 북(조선) 대사관에서 가진 기자 회견에서 북(조선) 외교부가 1996년 2월 26일 미국에 제의한 잠정 협정 체결 제안을 미국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은 언젠가는 우리의 제안에 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미주동아』 1996년 3월 14일자)

108) **32p 27줄** 여기서 미국이 파악하고 있는 주관적 조건이란 적어도 한(조선)반도를 지향한 미국의 관여·확장 전략에 대한 정치·외교·군사·경제 부문의 전략 수행력을 높은 수준에서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는 뜻이며, 객관적 조건이란 북(조선)의 사회주의적 국가 역량이 여전히 강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109) **33p 9줄** 1995년 1월 20일 미 국무부가 북(조선)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의 일부를 완화한다고 발표했을 때, 미국 언론은 “이번 완화조치는 미국이 지난 십여년 동안 공산주의 나라들에 대해 사용했던 접근 방식, 즉 통상 개방과 정보 및 이념의 유입 증가라는 접근 방식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서방의 이념이 유입되는 것은 곧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행정부 관리는 미국의 의도는 (북(조선)에 대한-인용자 주) 정보 교환과 개방을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New York Times 1995년 1월 21일자) 이것은 미국이 관여·확장 전략을 한(조선)반도에서 유도·편입 정책을 통하여 수행할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다.

110) **34p 2줄** 『로동신문』 1995년 8월 12일자에 비망록 전문이 실려 있다. 북(조선) 외교부가 주한미군 주둔 50주년에 즈음하여 1995년 9월 7일자로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는 조·미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었는데도 아직 정치·군사적 정세가 완화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원인은 미군이 남(한국)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우리와 남조선에서 군 통수권을 쥐고 있는 미국 사이에 평화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조선반도 정세는 대폭 완화되지 않을 것이며 북남 합의 이행도 추동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하고, “조미 사이의 평화 보장 체계 수립은 다만 정전 체계를 평화 보장 체계로 전환시키는 문제이다”고 밝혔다. (『로동신문』 1995년 9월 8일자) 이와 같은 내용은 1995년 10월 11일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 나온 북(조선) 외교부 최수현 부부장의 연설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그는 연방제 평화통일 방안, 국가보안법 폐지, 정전 협정 폐기 및 미국과의 평화 체제 수립, 유엔 사령부 해체, 비무장지대 콘크리트 장벽 철거를 주장했다. (『조선일보』 1995년 10월 13일자) 여기서도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조·미 평화 조약 체결이 아니라, 조·미 평화 체제 수립을 주장했다는 점을 유의하여 보아야 한다. 그는 평화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남북 대화, 긴장 완화,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다.



111) 34p 5줄 북(조선)은 “오늘 북과 남 사이에는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서 이미 채택·발효시킨 북남 합의서를 제대로 리행하는 문제만이 남아있다” (『로동신문』 1996년 1월 10일자)고 주장하고 있다.

112) 34p 15줄 『한겨레신문』 1995년 10월 4일자. 남북의 군사력 감축 문제는 남북 당국자 협상으로 가능한 일이지만, 국제 사회의 다국적 군축 협상을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1995년 9월 21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 회의 본회의에서 남북이 다자간 군축 기구인 유엔 군축 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에 함께 가입하기로 결정한 것(『조선일보』 1995년 9월 23일자)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113) 34p 19줄 최근 비밀 해제된 존슨 대통령 기념 도서관 소장 문서를 소개한 남(한국)의 한 언론은 미국이 1968년의 1·21 사태와 푸에블로호 사건에 대해 어떻게 차별적으로 대응했는지를 검토했는데, 미국은 1·21 사태와 푸에블로호 사건을 연계시켜서 해결하자고 한 남(한국)의 요구를 묵살하고, 1·21 사태에 대해서는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남(한국) 당국에는 전혀 알리지도 않은 채 북(조선)과 비밀 외교 협상을 벌임으로써 조·미 협상과정에서 남(한국)을 완전히 배제하고 말았다고 한다. 남(한국)이 완전히 배제된 조·미 협상은 최근 조·미 ‘핵협상’에서도 되풀이된 바 있다. 이 언론은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서 규정한 한·미 동맹 관계가 자의적이고 일방적일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중앙일보』 1995년 10월 18일자)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미 관계에서 미국이 정보력과 작전 수립 능력, 주요 무기 생산에 대한 규제력을 장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남(한국)군에 대한 군사 지휘권(작전 통제권을 포함하는 최고 군사 결정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자의적 동맹’은 실제로는 군사적 예측 관계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미국이 한·미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한 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한·미 연합사령관이 그 전략지침을 받도록 함으로써 한·미 협의를 통해 작전 통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평시 작전 통제권은 남(한국)군에게 되돌려주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상징적인 조치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로 한·미 연합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포함하는 군사 지휘권을 행사하는 주체는 미국이라고 보아야 한다. 1950년 7월 이른바 작전 지휘권 이양 공한(군사 지휘권 이양공한이라고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이다)을 통해 유엔군 사령관(미군 장성)에게 넘어갔던 남(한국)의 군사 지휘권은 1978년 11월 한·미 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한·미 연합사령관(주한미군 사령관)에게 다시 넘어가고 말았는데, 한·미 연합사 설치법에는 한·미 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은 오로지 미국의 합동참모본부에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을 뿐 남(한국) 당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고조차 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규정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바로 이것은 북(조선)이 평화 체계 수립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남북 협상이 아니라 조·미 협상에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근거가 되고 있다.

114) 34p 29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백진현의 기고문 「북의 새 평화안」(『조선일보』 1995년 10월 5일자)에서 나온 주장이다. 그러나 이 주장의 전제는 남(한국)이 한국(조선)전쟁 당시 유엔군에게 군사 지휘권을 넘겨준 상태에서 전쟁을 수행했다는 사실, 전쟁을 종결한 정전 협정을 맺은 ‘협정 체결 당사자’에도 남(한국)은 (당시에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엔군이 될 수 없었으므로 유엔군이 나섰던 정전 협상에 참가할 자격이 없었으므로) 포함되지 않고 북(조선)-미국(유엔군을 대표한 미군)-중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조선)전쟁에 참전한 ‘법적 당사자’에서 남(한국)은 빠져있다는 사실, ‘조인 당사자’도 미국과 북(조선)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 정전 협정 체제를 준수하는 책임을 지도록 정전 협정문에 규정한 협정 체제 ‘준수 당사자’도 미국과 북(조선)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현재 한(조선)반도에서 대치한 당사자가 남(한국)과 북(조선)만이 아니라 미국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대치 당사자 가운데 남측의 일방을 이루고 있는 남(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는 서유럽이나 일본과 미국이 맺은 것처럼 ‘대등한 동맹 관계’가 아니라, 한·미 연합군에 대한 군사 지휘권을 행사하는 주체인 미국에게 남(한국)이 예속된 형태의 ‘기형적 동맹 관계’라는 사실 때문에 설득력을 잃어버리고 있다.

115) 34p 34줄 셀릭 해리슨의 기고문 「내전 개입 꺼리는 미국」(『한겨레신문』 1995년 12월 11일자)

116) 35p 5줄 『중앙일보』 1995년 10월 18일자.

## 미국의 한(조선)반도 정책은 바뀌고 있는가

1) 36p 9줄 워싱턴에서 민간 정책전문가들의 주장과 견해는 행정부의 정책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다. 학계나 연구기관에 흠어져 있는 전직, 현직 고위관료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들 전문가 집단들은 보신주의에 빠지기 쉬운 관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에 착안하기도 하며, 여론 조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므로 결국 대통령의 정책 결정 및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앙일보』 1996년 5월 15일자 참조)

2) 36p 21줄 ‘반쪽 짜리 통일학’으로 최근에 눈에 띄는 책은 이종석 씨가 지은 『분단시대의 통일학』(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8)이다. 그는 이 책에서 냉전체제가 분단체제를 규정하고 있는 결정적 요인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분단체제를 규정하고 있는 결정적 요인은 냉전체제가 아니라, 한(조선)반도의 분단체제에 대한 미국의 지배주의 전략이다. 그는 냉전체제가 무너진지 오래되었는데도, 분단체제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원인을 ‘탈냉전 진행의 비동시성(非同時性)’이라고 설명했는데, ‘비동시적 진행’이란 원인을 분석하는 개념이 아니라 결과로 나타난 현상을 서술하는 개념이다. 그는 현상을 서술하는 개념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냉전체제 이후에도 분단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분단체제란 미국의 지배주의 전략과 이에 공조하는 남(한국)의 대북전략을 한쪽으로 하고, 여기에 대항하는 북(조선)의 대미전략과 대남전략을 다른 한쪽으로 하는 날카로운 대결구도이며, 팽팽한 힘의 균형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대결구도와 힘의 균형상태는 냉전체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탈냉전시기에도 유지되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냉전체제의 변동과 상관 없이 분단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3) 37p 4줄 『중앙일보』 1998년 3월 14일자.

4) 37p 7줄 『중앙일보』 1998년 1월 8일자.

5) 37p 9줄 같은 신문.

6) 37p 17줄 「북한, 휴전선 포부대 철수하라」, 『시사저널』 444호, 1998년 4월 30일자, 49쪽.

7) 37p 24줄 『조선일보』 1998년 8월 6일자.

8) 37p 29줄 「워싱턴 매파, 북한에 군축 압력」, 『시사저널』 441호, 1998년 4월 9일자, 52쪽.

9) 38p 7줄 『중앙일보』 1998년 1월 8일자.

10) 38p 17줄 『한국일보』 1998년 2월 13일자.

11) 38p 19줄 『조선일보』 1998년 2월 18일자.

12) 38p 26줄 「북한, 휴전선 포부대 철수하라」, 『시사저널』 444호, 1998년 4월 30일자, 49쪽.

13) 38p 29줄 『중앙일보』 1998년 2월 19일자.

14) 38p 30줄 『시사저널』 444호, 1998년 4월 30일자, 49쪽.

15) 39p 2줄 『조선일보』 1998년 6월 6일자.

16) 39p 4줄 『한겨레』 1998년 6월 6일자.



17) 40p 4줄 '을지·포커스 렌즈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관해서는 「시사저널」 제465호, 1998년 9월 24일, 36-38쪽 참조. 「시사저널」은 올해 '북침연습'을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그동안 이 훈련을 통해서 남(한국)과 미국 사이에 의견차이가 생겨났으므로, 이를 생각하여 생략하였다고 추정하였다.

18) 40p 6줄 「조선일보」 1998년 10월 16일자.

19) 40p 9줄 「한국일보」 1998년 10월 21일자.

20) 40p 26줄 스나이더의 이 논문은 1997년 11월과 12월, 1998년 3월에 미 의회 산하 연구기관인 미국평화연구원(USIP)에서 열린 '한(조선)반도 정책 연구회'에서 토론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특별보고서로 1998년 6월 초에 발표되었다. 남(한국) 언론은 이 정책 연구회는 1993년 가을 한(조선)반도의 핵위기가 고조되었던 때부터 열리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연구와 토론 결과를 특별보고서로 작성하여 발표해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정책 연구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이사장 몰튼 애브라모위츠, 전 국방차관 리처드 아미티지, 전 주한 미국대사 다닐드 그렉, 전 국무차관 미키 캔터, 전 국무차관 정책보좌관 로버트 매닝, 국무부 정책기획실 부실장 앨런 톰빅,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리처드 앨런,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빌 클라크다. (「중앙일보」 1996년 5월 20일자)

21) 41p 8줄 Robert A. Manning, James J. Przystub, "The Great Powers and the Future of Korea: Paper Prepared for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Task Force on Korea", (1998년 3월 2일), 2쪽.

22) 41p 9줄 같은 글, 3쪽.

23) 41p 16줄 「"한국 먼저 군비 줄여라" 미국 메시지에 숨은 뜻」, 「시사저널」 440호, 1998년 4월 2일자, 58쪽.

24) 41p 32줄 「북한, 휴전선 포부대 철수하라」, 「시사저널」 444호, 1998년 4월 30일자, 49쪽.

25) 41p 33줄 「워싱턴 매파, 북한에 군축 압력」, 「시사저널」 441호, 1998년 4월 9일자, 52쪽.

26) 42p 6줄 「조선일보」 1997년 4월 17일자.

27) 42p 17줄 셀릭 해리슨, 「군비축소의 이중효과」, 「한겨레」 1월 10일자.

28) 42p 21줄 「"한국 먼저 군비 줄여라" 미국 메시지에 숨은 뜻」, 「시사저널」 440호, 1998년 4월 2일자, 58쪽.

29) 42p 29줄 「북한, 휴전선 포부대 철수하라」, 「시사저널」 444호, 1998년 4월 30일자, 49쪽.

30) 43p 2줄 C. Kenneth Quinones, "The Korean Peninsula Preserve the Past or Move Toward Reconciliation", (1998년 1월 28일), 11쪽. 퀴노네스는 1997년 7월과 8월 미군 유해 발굴단의 국무부 대표로서 북(조선)에 머물면서 발굴 현장을 진두 지휘했던 일을 사진 자료와 함께 「시사저널」 431, 432 합병호(1998년 1월 29일-2월 5일자)에 기고하였다.

31) 43p 6줄 「워싱턴 매파, 북한에 군축 압력」, 「시사저널」 441호, 1998년 4월 9일자, 52쪽.

32) 43p 10줄 「"한국 먼저 군비 줄여라" 미국 메시지에 숨은 뜻」, 「시사저널」 440호, 1998년 4월 2일자, 58쪽.

33) 43p 14줄 같은 글, 58-59쪽.

34) 43p 19줄 Don Oberdorfer, "U.S.-R.O.K. Relations", (1998년 6월 12일), 7쪽. 이 논문이 외부에 공개된 시점은 6월 12일로 되어 있으나, 대외관계협의회(CFR)의 코리아문제 특별연구반에서 처음으로 발표된 시점은 6월보다 훨씬 이전으로 볼 수 있다.

35) 43p 31줄 Frank Jannuzi, "Can the United States Cause the Collapse of North Korea? Should We Try?", (1998년 6월 12일), 6쪽.

36) 44p 2줄 Robert A. Manning, James J. Przystub, 위의 글, 2쪽.

37) 44p 4줄 「시사저널」은 이렇게 지적했다. "군축 방안과 관련해 미국측이 최근 제시하고 있는 방안이 바로 남북의 장거리 직사포 부대를 휴전선으로부터 32-48km 후방으로 이동 배치하는 것이다. 남북이 이같은 방안에 합의할 경우 미국은 중재자 및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러시아 미사일 부대에 미군 감시단이 파견되어 있는 것처럼 북한이 만약 북한 군부대에 미국측 중재 요원을 받아들이기로 결단을 내릴 경우 북한의 대외 신용도가 매우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에 미국은 대규모 식량지원이나 경제제재 완화 같은 선물을 줄 용의도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 매파, 북한에 군축 압력」, 「시사저널」 441호, 1998년 4월 9일자, 52쪽)

38) 44p 6줄 「"한국 먼저 군비 줄여라" 미국 메시지에 숨은 뜻」, 「시사저널」 440호, 1998년 4월 2일자, 58쪽

39) 44p 12줄 「북한, 휴전선 포부대 철수하라」, 「시사저널」 444호, 1998년 4월 30일자, 49쪽.

40) 44p 19줄 「조선일보」 1998년 6월 18일자.

41) 44p 28줄 C. Kenneth Quinones, 위의 글, 8쪽.

42) 45p 3줄 같은 글, 9쪽.

43) 45p 7줄 「중앙일보」 1998년 6월 18일자.

44) 45p 8줄 제임스 릴리 대담, 「시사저널」 제462호 (1998년 9월 3일), 56-57쪽 참조.

45) 45p 12줄 미 국방부 차관 존 햄리는 1998년 10월 2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미국은 '광명성 1호'를 발사한 북(조선)의 기술 수준에 놀랐다고 시인하면서 북(조선)이 곧 초기단계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미주판, 1998년 10월 8일자) 이 문제에 관한 더 자세한 논의는 북미주조국통일동포회의의 웹진 '진보 코리아 21' (<http://members.aol.com/reunikorea>)에 실린 조하만의 평론 「광명성 1호와 미국」을 참조하십시오.

46) 45p 20줄 「동아일보」 1998년 10월 3일자.

47) 45p 23줄 「한겨레」 1998년 10월 3일자.

48) 45p 25줄 이 내용은 「요미우리 신문」이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하여 10월 7일자로 보도한 것이다. (「한국일보」 1998년 10월 8일자)

49) 46p 3줄 같은 글, 5쪽.

50) 46p 8줄 같은 글, 10쪽.



- 51) 46p 13줄 Richard V. Allen, "Kim Dae Jung Looks North: Options for Korea and the United States" (1998년 6월 12일), 9쪽.
- 52) 47p 6줄 C. Kenneth Quinones, 위의 글, 10쪽.
- 53) 47p 17줄 *Asia after "Miracle": Redefining U.S. Economic and Security Priorities*, Report of a Study Group of the Economic Strategy Institute, [1998], 66쪽.
- 54) 47p 22줄 같은 책, 67쪽.
- 55) 47p 26줄 같은 쪽.
- 56) 47p 28줄 『중앙일보』 1998년 9월 30일자.
- 57) 47p 34줄 『한겨레』 1997년 5월 21일자. 이 보고서가 발표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5월 30일 국방장관 윌리엄 코언은 로스앤젤레스의 한 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한반도는 전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미국은 앞으로 4년동안 한반도와 중동의 대규모 지역분쟁에 동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1997년 6월 2일자)
- 58) 48p 1줄 『중앙일보』 1998년 9월 30일자.
- 59) 48p 3줄 『세계일보』 1998년 7월 1일자.
- 60) 48p 7줄 『중앙일보』 1998년 6월 13일자.
- 61) 48p 14줄 Richard V. Allen, 위의 글, 8쪽.
- 62) 48p 16줄 『시사저널』 425호, 1997년 12월 18일자, 70쪽. 퀴노네스는 "나는 개인적으로 4자회담에 냉소적입니다. 협상에 관한 협상만 계속되고 말만 무성할 뿐 회담에 진전이 없어요"라고 하면서, 거부감을 보이기도 했다. (『중앙일보』 1998년 9월 15일자)
- 63) 48p 27줄 『시사저널』 426호, 1997년 12월 25일자, 54-55쪽.
- 64) 48p 29줄 같은 쪽.
- 65) 49p 4줄 C. Kenneth Quinones, 위의 글, 7쪽.
- 66) 49p 6줄 이 보고서는 6자 협의 구도와 함께 조·미 안보대화의 병행을 주장하였다.  
(*Asia after "Miracle": Redefining U.S. Economic and Security Priorities*, 67쪽)
- 67) 49p 9줄 『한겨레』 1998년 2월 21일자.
- 68) 49p 11줄 Robert A. Manning, James J. Przystup, 위의 글, 17쪽.
- 69) 49p 13줄 같은 글, 18쪽.
- 70) 49p 16줄 『한겨레』 1998년 6월 27일자.
- 71) 49p 16줄 『중앙일보』 1998년 7월 1일자.

- 72) 50p 1줄 Robert A. Manning, James J. Przystup, 위의 글, 2쪽.
- 73) 50p 9줄 C. Kenneth Quinones, 위의 글, 7쪽.
- 74) 50p 13줄 Robert A. Manning, James J. Przystup, 위의 글, 10쪽.
- 75) 50p 18줄 『조선일보』 1998년 6월 26일자.
- 76) 50p 23줄 *Washington Post*, 1998년 10월 4일자 참조. 페리는 「니혼게이자이 신문」 1998년 10월 16일자 대담에서 클린턴으로부터 특별고문단에 참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히고, 이 특별고문단은 중장기 대북전략을 세우고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1998년 10월 17일자)
- 77) 50p 29줄 Robert A. Manning, James J. Przystup, 위의 글, 10쪽.
- 78) 51p 3줄 같은 글, 9쪽.
- 79) 51p 7줄 같은 글, 2쪽.
- 80) 51p 14줄 Frank Jannuzi, 위의 글, 2쪽.
- 81) 51p 17줄 같은 쪽.
- 82) 51p 24줄 『중앙일보』 1998년 5월 12일자.
- 83) 51p 27줄 케네스 퀴노네스는 이렇게 말했다.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 특히 국무부 사람들은 새로운 것, 즉 북(조선)이 국제 사회의 책임적인 성원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줄임) 국방부는 국무부가 현재 취하고 있는 당근 정책에 공공연하게 반대하지는 않지만, 국방부의 중요한 정책 담당자들은 북(조선)이 내부 파열이나 폭발로 불가피하게 무너진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줄임) 따라서 국방부의 정책 순위는 유엔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데 집중된다. 이 모든 사안들은 전쟁 역지력을 통하여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수행된다. (줄임) 국가안보회의는 대외정책을 역동적인 과정이 아니라 학술 토론처럼 다루는 듯하고 있는데, 국무부와 국방부 사이에서 벌어지는 말싸움을 그냥 보아 넘기고 있다." (C. Kenneth Quinones, 위의 글, 4쪽) 북(조선)에 관한 정보는 국무부의 정보분석실과 동북아국의 북(조선) 담당관, 중앙정보국(CIA)의 국가담당관(CIO), 국방정보국(DIA)의 국가담당관(DIO)이 분석한다. (『중앙일보』 1997년 5월 17일자 참조)
- 84) 51p 28줄 조셉 나이는 국방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보를 지내던 1995년 초 동아시아 전략보고서 작성을 주도했던 사람이다. 그는 이 전략보고서에서 주한미군 3만7천명을 포함하여 동아시아에 10만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1995년 말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정책대학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 85) 52p 2줄 조셉 나이의 기고문 「한·미동맹의 과제」 (『조선일보』 1996년 7월 1일자)
- 86) 52p 11줄 『시사저널』 414호, 1997년 10월 2일자, 62-66쪽.
- 87) 53p 9줄 「남북 이을 다리는 '한·미 공조」 『시사저널』 430호, 1998년 1월 22일자, 76쪽.
- 88) 53p 14줄 통보에 관해서는 『한국일보』 1998년 6월 9일자 참조, 일본인 처 방일 허용 중단 발표에 관해서는 『New York Times』 1998년 6월 10일자 참조.
- 89) 53p 21줄 Frank Jannuzi, 위의 글, 2쪽.



- 90) 53p 22줄 같은 글, 6쪽.
- 91) 53p 26줄 Richard V. Allen, 위의 글, 6쪽.
- 92) 53p 31줄 같은 글, 9쪽.
- 93) 54p 5줄 같은 글, 10쪽.
- 94) 54p 6줄 Robert A. Manning, James J. Przystup, 위의 글, 2쪽.
- 95) 55p 7줄 같은 글, 11-12쪽.
- 96) 55p 13줄 같은 글, 12쪽.
- 97) 55p 25줄 「미국의 한반도 전략은 통일」, 『시사저널』 416호, 1997년 10월 16일자, 80쪽.
- 98) 56p 20줄 「한겨레」 1998년 6월 8일자.
- 99) 56p 26줄 「한겨레」 1998년 2월 21일자.
- 100) 56p 29줄 이를테면, 1998년 5월 미 하원은 '종교박해금지법'을 채택했는데, 이것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게 자동적으로 경제제재를 가하도록 한 법이다. 이 법이 하원에서 통과되자 미국의 기업 단체들이 반발하면서 공화당에 선거 자금을 주지말자고 했다. 미국 제조업협회도 경제 제재로 미국 기업들이 무역 기회를 잃게 되고 국제 경쟁에서 피해를 입는다며 남용되고 있는 경제제재 정책을 비판하였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 온건파로 분류되는 리처드 루가(Richard Lugar) 의원은 경제제재를 가하기에 앞서 그 효력을 검토하도록 요구하는 '경제제재 개혁법안'을 제출하였다. 상원의 민주-공화 양당 총무는 관련 법률을 다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최근 각종 경제제재법이 외교정책의 유연성을 훼손시켜 외교정책이 발목을 잡히는 사례가 있다며 의회가 이를 다시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그렇지만 공화당은 종교 문제와 도덕 문제까지 들고 나와 다른 나라를 압박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경제제재라는 '무기'를 쉽게 내려놓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미국이 2차 대전 뒤에 발동한 경제 제재 조치는 1백건인데, 이 가운데 60건을 1993년 이후에 취했다. 현재 미국은 사회주의 나라들과 반미 성향국들은 물론이고 캐나다, 멕시코, 대만 같은 우방국에게도 경제 제재 조치를 가하고 있는데, 그 수는 무려 75개 나라에 이른다. (『한겨레』 1998년 6월 23일자)
- 101) 57p 3줄 「중앙일보」 1996년 7월 18일자.
- 102) 57p 9줄 「시사저널」 414호, 1997년 10월 2일자, 71쪽.
- 103) 57p 14줄 같은 쪽.
- 104) 57p 24줄 「남북 대화 재개 채널 미국이 원격 조종」, 『시사저널』 426호, 1997년 12월 25일자, 55쪽.
- 105) 57p 31줄 Richard V. Allen, 위의 글, 6-7쪽.
- 106) 58p 3줄 Robert A. Manning, James J. Przystup, 위의 글, 6쪽.
- 107) 58p 5줄 「한국일보」 1998년 2월 24일자. 여기서 중국의 한(조선)반도 정책을 살펴보자. 자료 수집의 한계 때문에 이 문제를 자세히 논하기는 힘들지만, 최근 중국 전략·관리 연구회(1989년 설립된 국무원 산하 학술 연구단체로 13개 산하기구를 두고 있으며 학자, 정치인이 참여하고 있다)가 펴낸 「국제형세 분석보고」가 관심을

- 끌고 있다. 이 보고서는 북(조선)의 경제난 해결, 한(조선)반도의 비핵화, 한(조선)반도에 대한 외세의 패권 추구 방지, 4자회담을 통한 평화 정착이라는 4개 목표를 달성하려면 중국이 북(조선)과 유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북(조선)이 미국과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미군을 철수시키려는 기본 전략을 바꿀 리 없으므로 조·미 관계는 어느 정도 개선되기는 하겠지만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중앙일보』 1998년 4월 10일자)
- 108) 58p 7줄 Ross H. Munro와 Richard Bernstein가 함께 쓴 책 「다가오는 중국과의 갈등(The Coming Conflict With China)」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다.
- 109) 58p 16줄 Asia after the "Miracle", 17쪽.
- 110) 58p 27줄 Don Oberdorfer, 위의 글, 4쪽.
- 111) 59p 2줄 「뉴욕타임스」는 김대중 대통령 취임에 때맞춰 내보낸 기사에서 그는 아시아에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지도자"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New York Times』 1998년 2월 23일자)
- 112) 59p 9줄 Richard V. Allen, 위의 글, 9쪽. 참고로 1970년대의 미·중관계 개선을 살펴보자. 미국은 1971년 3월 중국여행 금지조치를 해제했고, 7월 헨리 키신저가 대통령 특사로 중국을 비밀방문하였다. 1972년 7월 닉슨은 중국을 방문했으며, 1979년 1월 덩샤오핑의 워싱턴 방문을 계기로 중국과 미국은 국교를 정상화하고 3월에 대사관을 상호 개설했다. 7월에 미국은 중국에게 최혜국대우(MFN)를 주었다.
- 113) 59p 19줄 「남북 이을 다리는 '한·미 공조」 『시사저널』 430호, 1998년 1월 22일자, 74쪽.
- 114) 59p 21줄 Richard V. Allen, 위의 글, 9쪽.
- 115) 59p 26줄 Don Oberdorfer, 위의 글, 2쪽.
- 116) 59p 30줄 「New York Times」 1998년 3월 1일자.
- 117) 60p 3줄 Don Oberdorfer, 위의 글, 5쪽.
- 118) 60p 5줄 같은 쪽.
- 119) 60p 8줄 같은 쪽.
- 120) 60p 24줄 C. Kenneth Quinones, 위의 글, 7쪽.
- 121) 61p 4줄 Robert A. Manning, James J. Przystup, 위의 글, 17쪽.
- 122) 61p 8줄 「시사저널」 435호, 1998년 2월 26일자, 58-59쪽.
- 123) 61p 25줄 Robert A. Manning, James J. Przystup, 위의 글, 1쪽.
- 124) 61p 31줄 「남북 대화 재개 채널 미국이 원격 조종」, 『시사저널』 426호, 1997년 12월 25일자, 55쪽.
- 125) 62p 14줄 「시사저널」 418호, 1997년 10월 30일, 71쪽.
- 126) 62p 16줄 「한겨레」 1998년 5월 28일자.
- 127) 62p 17줄 Frank Jannuzi, 위의 글, 5쪽.